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연구과제명: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전략비전

## 평화번영의 가교국가(link state) 전략 (Moon' s LinkER State Strategy, MLSS)

업체명: 한동대학교  
책임연구자 김 준 형

통일부장관 귀중

## 목차

### 요약(Executive Summary)

1. 문재인 정부의 가교국가전략(MLSS)이란 무엇인가?
2. 가교국가 실현 방법론: 플랫폼전략
3. 가교국가 전략의 로드맵: '남북공동의 집'과'남북하나의 집'
4. 가교국가의 확장성 및 역내국들의 동북아 지역비전들과의 연결성
5.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 제안

부록(Appendix): 가교국가전략 PPT 다이어그램

## 요약(Executive Summary)

### 1. 문재인 의 가교국가전략(MLSS)이란 무엇인가?

■ MLSS는 가교국가의 역할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을 기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구상

- 기존질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안보딜레마, 미중패권갈등이 심화되고, 북한 핵개발과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부상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소외와 갈등의 심화로 사회적 위기는 심화되어 왔음
  -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뉴노멀(New Normal)로 대표되는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예측성의 시대에서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가교국가(LinkER state)전략'을 시동함
  - 우리는 가교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로 남한과 북한을, 더 나아가 북방과 남방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번영-통일 기반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구현하고자 함
  -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역비전인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이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과 북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와 중국 및 동남아를 연결함
  - 해당지역에 평화(Peace thru Security)와 번영(Prosperity thru Peace)을 뿌리내리는 한편, 평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Reunification thru Peace & Prosperity)을 추구
  - 이러한 물적 토대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휴머니즘,

행복과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구현함

## 2. 가교국가 실현 방법론: 플랫폼 전략

### ■ 추진전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로 남과 북, 남방과 북방을 연결함

- 플랫폼전략이란 공유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연결, 협력함으로써 상호 Win-Win을 모색하는 전략을 말함
  - 공유 가능한 인프라로는 DMZ,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특구, 경제개발특구 등의 유형의 인프라는 물론이고, 제도와 법률, 촛불혁명의 경험과 고양된 시민의식, 한류를 포함한 문화자산,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무형의 인프라까지 포함 가능
  -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player)들로는 대외적으로는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대내적으로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음
- 제도적 플랫폼에 기반한 평화의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국내, 남북, 관련국들을 연결함으로써 이들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제도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제도가 담고 있는 이념을 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행위자들을 협력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 조성
  -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인 ‘통일국민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내적 평화를, ‘남북기본협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그리고 ‘평화협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과 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가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추진함
- 물리적 플랫폼에 기반한 번영의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국내, 남북,

- 관련국을 연결함으로써 이들 해당 지역에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함
- IT 플랫폼, 물류 플랫폼 등으로 특화된 경제특구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이들의 기업이익추구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를 계기로 참여기업들이 계속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 가시화
  - 훈춘과 나선, 단둥과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는 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해당 지역의 번영을 모색할 수 있음
  - 개성공단, 첨단기술구 등에는 주로 IT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혁신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해당지역의 번영을 모색할 수 있음

### 3. 가교국가전략의 로드맵: ‘남북 공동의 집’과 ‘남북 하나의 집’

■ 로드맵: MLS는 비핵화와 연계된 평화->번영->통일 로드맵 속에서 추진해야 가장 효과적임

- 비핵화를 동결과 폐기 단계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남북 공동의 집 단계와 남북 하나의 집 단계로 접근
  - 핵개발프로그램 동결 단계인 남북 공동의 집에서는 평화의 과제로 종전 선언, 남북 및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며, 번영의 과제로 DMZ 피스밸리(Peace Valley),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특구 재개, 북중 접경지역 개발 등을 추진함
  - 핵 폐기 단계인 남북 하나의 집에서는 평화의 과제로 평화체제, 북미대사관 교환, 대북제재 해제 등을 추진하며, 번영의 과제로 환동해·환서해 경제회랑,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의 연결을 추진함
- 평화->번영->통일의 로드맵으로 볼 때, ①남북관계의 복원을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Trigger가 되어 남북 공동의 집 단계로 진화하며, ②남북 공동의 집 단계에서는 핵 동결이 Trigger가 되어 남북 하나의 집 단계로 진화하며, ③남북 하나의 집 단계에서는 핵 폐기가 Trigger가 되어 남북연합 더 나아가 통일로 진화하게 됨

- 남북 공동의 집 단계에서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에서, DMZ 피스벨리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에 우선적·시범적으로 각각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일종의 모판(SEEDBED)으로서의 역할
  - 관련 사업으로 DMZ의 평화공원·에코공원(Peace Park·Eco Park) 조성, 판문점 국제평화대학 설립, 개성공단의 복구 및 확대, 금강산관광 특구 복원 등을 추진
- 남북 공동의 집 단계에서는 남방과 북방에 단동-신의주-심양, 훈춘-나선-블라디보스토크, 동북아경제회랑에 물류/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 관련 사업으로 스마트 팜, Ra-Za(라진-자루비노) Sea Complex, 철도, 도로, 전력망, 광케이블 연결, 연선거점도시(특구) 개발 등을 추진
- 남북 하나의 집 단계에서는 한반도신경제 구상에서는 환동해·환서해 경제회랑, 주요 산업의 재건 및 건설 참여, 에너지·물류·IT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 관련 사업으로 ① 생산: 북한의 해당 지역 산업이 특화된 경제특구 개발 참여, ② 물류: 경의선 및 동해선 물류·에너지 인프라 연결,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남북 스마트시티 건설
- 남북 하나의 집 단계에서는 남방과 북방을 아우르는 'TOUCH ASIA'를 구축하기 위해 IT, 물류, 문화, 교육플랫폼 활용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
  - 관련 사업으로 아시아의 남방벨트와 북방벨트의 인프라 연계, IT,

한류의 아시아 공유재화, 아시아 공동인재 양성과 교류, 사람이 먼저인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공동체 구축 등을 추진

#### 4. 가교국가의 확장성과 역내국들의 동북아 지역비전과의 연결성

-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통합전략
  -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의 핵심이었던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남방, 신북방, 동북아평화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재부각하는 동시에 연계전략 개발 필요
  -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에도 불구하고 정권출범 이후 북방경제위원회의 독립적인 설립과 함께 각 부처로 산개되어버린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재결합해서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제시

※ 현재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확대개편 필요

- 역내강대국들의 지역비전들이 한국의 배타적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이용하여 진영논리를 약화시키고, 협력분위기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기존 지역비전들을 연결하는 모듈역할
  - 동북아강대국의 지역비전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입지 확대 필요
  -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배타적 선택구도보다 한국이 이 두 가지 구상이 가진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편승 또는 연결시키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

- 미래를 위한 중장기 평화구축 비전은 신성장동력 개발전략과 연계 필요
  - 환동해권, 환황해권, 휴전선이 만들어내는 'H'형태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함께 적극적인 남북화해정책을 통해 한반도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로 향하는

-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 호주로 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우회하는 종합적 청사진 필요
-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와 다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역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주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음

## 5.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 제안

### ■ 평화의 플랫폼의 벤치마킹 사례: DMZ는 스트라스부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화와 생태관광의 Peace Valley로 조성

-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는 갈등의 땅에서 유럽의 수도로 전환된 지역이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광지로 알려져 있음
  - 알자스의 중심도시로 알프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및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배경지역: 유럽의회,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기구 입주
  - 동시에 노트르담대성당 등 중세유럽의 건물, 거리 등을 보존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
- DMZ 평화지대를 분단에서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생태/문화역사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확장할 수 있음
  - 분단에서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평화기구, 국제평화대학, 국제병원 등 평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한편, 남북한 학자들로 구성된 통일연구원, 한반도 개발연구원 등 평화/통일 관련 연구기관 신설
  - 생태·문화·역사관광지 개발은 환경공원(eco-park) 조성을 통한 생태 관광, 도서관, 전시장 등으로 구성된 역사박물관, 공연장, 갤러리 등을 구성된 평화의 전당 등을 신설
- 개성공단의 기존 3단계 확장계획을 변경하여, 1단계는 그대로

경공업 단지로 두되, 2, 3단계는 4차 산업혁명산업단지로 재편하여  
관련 기업 및 시설들을 유치하고 개성공단 전체를 Smart City로  
건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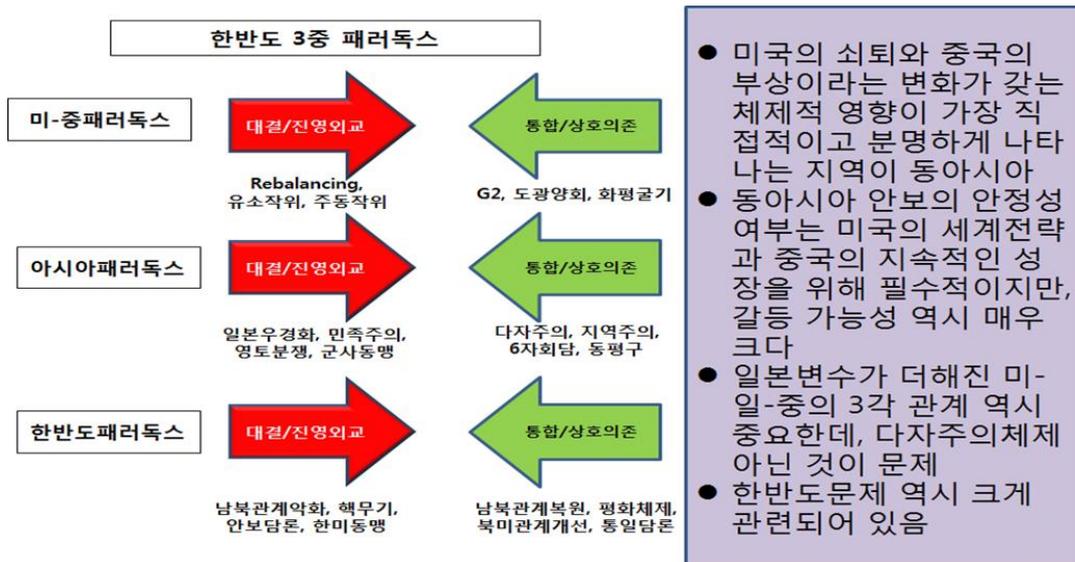
-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R&D 센터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할 창업지원센터 등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 청년들의 start-up을 지원

- 이처럼 개성공단의 기본 취지에 4차 산업혁명 및 세계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Smart City를 조성함으로써  
Apple,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만들어 낼  
혁신을 위한 Ecosystem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북한 전역, 그리고 북방 및 남방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임

# 1. 가교국가란 무엇인가?

## 1-1 문재인정부가 물려받은 국제환경

- **기존질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안보딜레마, 미중패권갈등이 심화되고, 북한 핵개발과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부상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소외와 갈등의 심화로 사회적 위기는 심화되어 왔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온 미국 주도의 ‘규범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제질서(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
  -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뉴노멀(New Normal)로 대표되는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예측성의 시대에서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안보환경 5대 위기: 1) 미중패권경쟁; 2)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와 빈부격차 심화; 3)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4) 민주주의 정당성 위기; 5) 테러리즘 확산
- 높은 경제 상호의존도에 비해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매우 낮으며,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왜곡논쟁, 핵개발 등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증가일로

- 미중의 기싸움이 만들어내는 단층선(fault lines) 및 발화점(flash points): 1) 한반도; 2) 동중국해; 3) 중국-대만 양안; 4) 남중국해

4개의 경계선 또는 발화점-미중의 치열한 기싸움



- 한반도  
THAAD 배치
- 센카쿠(조어도)  
미일동맹강화
- 중국-대만 양안
- 남중국해  
베트남-필리핀-미국의 협력강화



-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삼켜버리는 상황이 지속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 외교 비전 부재 현상 심화

## 1-2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 시동

-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가교국가(LinkER state)전략’을 시동함**
  - 우리는 가교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로 남한과 북한을, 더 나아가 북방과 남방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번영-통일 기반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구현하고자 함
  -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역비전인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이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남과 북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와 중국 및 동남아를 연결함
  - 해당지역에 평화(Peace thru Security)와 번영(Prosperity thru Peace)을 뿌리내리는 한편, 평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Reunification thru Peace & Prosperity)을 추구
  - 이러한 물적 토대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휴머니즘, 행복과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구현함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아시아지역공약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이후 부분적인 진전을 제외하고 답보**
  -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2018.5.9)을 기해 불명확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전략 및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평창 문재인 한반도 전략비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개념, 모델, 로드맵의 개발 필요
  -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평화체제구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옴으로써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비전 마련 시급



**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이 입지 확대 필요**

-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배타적 선택구도보다 한국이 이 두 가지 구상이 가진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편승 또는 연결시키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

● **한반도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에서 ‘신(新),’ 즉 새로움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 필요**

- 신경제지도: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남북한 경제연합과의 차별화 개념 보완
- 신북방정책: 남북이념대결에서 우위를 위한 북방정책과는 차별화된 개념
- 신남방정책: 미·일·중·러 4강 외교 중심의 한국 외교지평을 넓혀 동남아를 5번째 중요한 외교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며, 가능하다면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 호주까지 확대하겠다는 개념
- 대체에너지,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개념의 적용



●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지역비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다자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지역비전들의 장점을 살려 계승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지역비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발전적 종합 필요

- 한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 평화구축 비전은 신성장동력 개발전략과 연계 필요
- 환동해권, 환황해권, 휴전선이 만들어내는 ‘H’형태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함께 적극적인 남북화해정책을 통해 한반도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로 향하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로 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우회하는 종합적 청사진 필요
-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와 다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역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주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음



### 1-3 MLS는 가교국가의 역할을 통해 평화-번영-통일 기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구상

#### ● 문재인인의 가교국가전략(MLSS)

- 기존 지역비전 및 다자협력체들의 연결고리, Boosting Platform, 레고 블록, 또는 모듈 같은 형태로 기존 국가들의 지역비전들을 연결하자는 구상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의 연결시켜 하나의 통합된 전략으로 추진
- 한국의 배타적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진영 대결적 선택의 구도를 약화시키고, 협력적 분위기를 확대하는 전략
- 포스트 평창의 한반도 전략비전 구체화: 평화 아젠다를 지속하되 동시에 경제 아젠다를 접목
- 한국의 매력포인트 및 북한의 매력포인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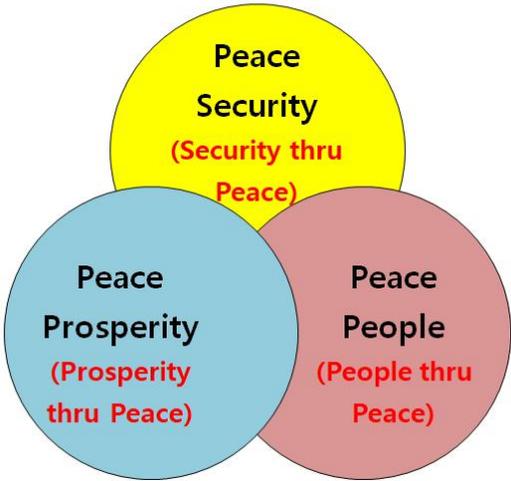
●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 평화안보, 평화번영, 평화사람**

평화안보 Peace Security: Security through Peace

평화번영 Peace Prosperity: Prosperity through Peace

평화사람 Peace People: People through peace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 목표  
평화안보, 평화번영, 평화사람



● **건국 100주년 비전과 담론: 3·1만세에서 촛불로**

- 3.1절 기념사 주제
-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재확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상징을 물려주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
- 평화비전과의 연결: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촛불혁명과의 연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며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건국100주년 3.1만세에서 촛불로

비민주주의 적폐청산

천박한 자본주의 적폐청산

한반도분단 적폐청산

## 2. 가교국가의 실현 방법론: 플랫폼 전략

### 2-1 왜 플랫폼 전략을 적용했는가?

- Moon's LinKER State에 중요한 개념은 '연결'과 '주도'임. 즉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로 남한과 북한, 남방과 북방을 연결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임
  - 따라서 Moon's LinKER State에 적합한 전략은 핵심 요소인 연결과 주도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이와 일치하는 전략이 플랫폼 전략임. 물론 기업의 경영전략이지만,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전략으로 확대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함

### 2-2 플랫폼의 개념과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

- 플랫폼의 개념: 플랫폼이란 기차역의 승강장이란 의미에서 출발, 강사, 음악지휘자, 다이빙 선수 등의 활동무대처럼 ‘반복활동을 하는 공간이나 구조물’을 의미하며, 또는 정당의 강령이나 공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 구조물’을 지칭하기도 함
  -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대라 할 수 있음.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이나 부품 같은 유형물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술 같은 무형물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모두 플랫폼이 될 수 있음(최병삼 외,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 )
  - 따라서 이를 확대하면 물류, IT, 제조 특화된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등의 유형의 구조물도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통일국민협약, 남북기본협정 및 평화협정 등의 개념적 구조물도 플랫폼이 될 수 있음

## ● 플랫폼의 작동 원리

### ① 개방(공유 인프라 제공)

- 플랫폼은 개방성을 풀어내고 생태계에 접목하는 출발점임. 쉽게 말하면 생태계 구성원이 뛰어노는 ‘운동장’이라 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이 높은 나라나 조직일수록 장수했음. 로마는 천년 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개방성에 있었음
- 로마인은 지성으로는 그리스인보다 못했고, 체력으로는 게르만인보다 못했으며, 기술력으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했고, 경제력으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음
- 대신 로마는 이들을 담아내는 플랫폼 역할을 했고, 덕분에 로마의 개방된 플랫폼 위에서 교육, 경제, 전쟁의 경쟁력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음
- 즉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그 안에서 각종 생태계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플랫폼이 많을수록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나라는 발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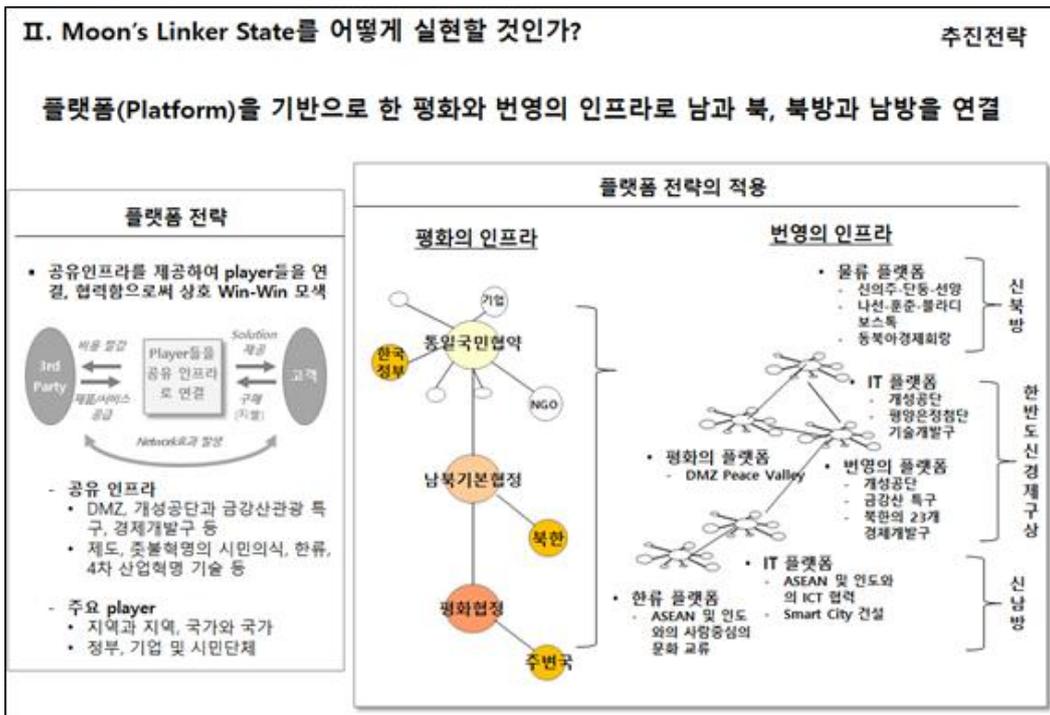
### ② 연결

- 플랫폼은 사람들을 연결하여 각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가치를 창출함
- 로마는 돈이 생기면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닦았음. 그렇게 해서 8만 km에 달하는 도로를 만들었음
- 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다니고 만남의 장이 형성됨. 만남의 장은 학교 플랫폼, 시장 플랫폼, 운동 플랫폼 등으로 발전했음
- 그리고 로마는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렸음

### ③ 협력

- 연결을 통해 각각의 경제활동은 협업의 형태를 띠게 됨
- 혼자 하는 것보다 협업 즉, 만남을 통해 외부의 능력을 잘 결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됨
- 이런 점에서 플랫폼 전략과 상반되는 것이 piping 전략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전략임.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활동은 이 안에서 이루어짐. 이는 생태계 안의 모든 구성원이 협업하여 전략을 세워나가는 플랫폼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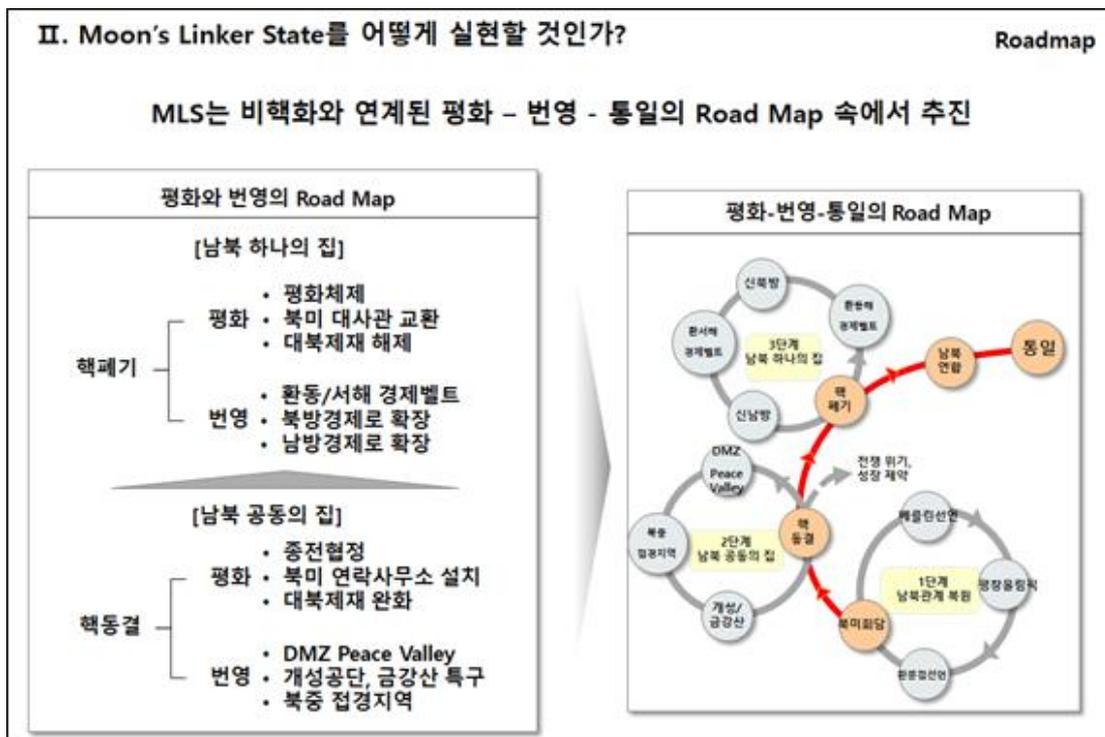


● 플랫폼의 기대효과: 혁신과 Network Effect

-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유인프라는 참가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즉 오래 머물거나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함
- 로마의 경우, 우수한 문명뿐 아니라 타 민족 또는 부족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정책 자체가 공유인프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플랫폼에서는 협업에 기초하여 Open Innovation을 통한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음
- 또한 플랫폼은 network effect를 갖고 있음. 즉 플랫폼을 통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임. 이러한 network 효과가 강화되면 시장을 독점하게 됨

- 이를 로마에 비유해 보면, 제3의 부족들이 로마의 포용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족들을 보면서 로마의 지배를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Pax Romana가 형성되는 이치와 같음



2-3 대표적 사례: 최근 Global Top 4개 기업들(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세상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음

- 이들은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이자, 최근 Global Top 4개 기업들임
  
- 이들의 공통점은 개방, 연결, 협력 등을 특성을 갖는 플랫폼 기업이란 데 있음
  
- 현대는 훌륭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이며, 향후 기업의 경쟁력 핵심은 플랫폼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음
  - 플랫폼을 주도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이것이 플랫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

### 3. 가교국가전략의 로드맵: ‘남북 공동의 집’과 ‘남북 하나의 집’

#### 3-1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 공동의 집’구상

#####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이후 동북아 신질서의 방향

-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면전환: 2017년에 들어와 북한은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 잇달아 전략적 도발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등 긴박한 상황 전개

-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 각종 도발을 예고
- 특히 북한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2016.12.9.~2017.5.9.)을 틈타 2017년 들어와 미사일 15회 20발 시험발사(문재인정부 출범 前 6회 9발, 後 9회 11발) 등 전략도발을 감행
- ※ 김정일시대(1998~2011): 9회에 걸쳐 16발

- 미국은 북한의 전략도발이 계속되고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배치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북 군사행동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

- 한편으로, 유엔안보리 대북 고강도 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초고강도 제재를 시행
- 다른 한편으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당시)이 대북 예방전쟁론을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군사행동 장전완료’를 발표하는 등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제고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대북, 대외적인 노력을 경주

- 북한을 상대로 ‘신베를린선언’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서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 8.15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안정 4원칙’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

●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의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본격 시동에 착수

- 2017년 12월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요구해 왔던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연기 검토를 시사하여 북측의 올림픽 참가 명분을 제공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하여 한미군사연습 연기에 대한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남북고위급 회담을 유도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 남북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의 목표

- 2017년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소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 △체제안전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비핵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 및 정상국가화 유도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1년 만의 정상회담임을 강조하는 등 ‘6.15시대의 부활’을 지향

● 「남북정상 판문점선언」의 논리구조

- 모두(冒頭)에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

- 제1조는 북한의 전략선택(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분야별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각계각층의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이산가족상봉,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 ※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 '핵 가진 경제빈국' vs. '핵 없는 신흥개도국'
- 제2조: 북한이 비핵화의 첫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위협 해소 방안과 관련, 모든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의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포함
- 제3조: 체제안전의 보장 방안과 관련, 무력불사용과 불가침합의 준수, 군사적 신뢰에 따라 단계적 군축,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한 올해 종전선언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 북미 정상회담

### ● 북미관계는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해 첫 걸음으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

- 북미 정상의 첫 만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고 소회 피력

### ●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내용

- 공동성명 서명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
- 공동성명에서는 ①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②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③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④ 미군 실종자·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에 합의

-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를 다룬 실무급의 「제네바 기본합의」, 「9.19공동성명」과 차이를 노정
  - 2차례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치·경제관계 정상화, 핵무기 불위협·불사용’(제네바기본합의),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9.19 공동성명) 등 바텀업 방식을 채택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정상화를 통해 큰 틀에서 비핵화라는 현안을 풀어나가는 톱다운 방식을 채택
- ※ 트럼프 대통령은 ‘검증’과 관련,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연합’의 기반 구축

### □ 남북관계의 개선 방향과 ‘남북연합’

- 최근 있었던 4.27 및 5.26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과거의 ‘6.15체제’로 회복
  -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시작된 ‘6.15체제’는 우리나라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1단계에 해당하는 화해·협력 시대를 의미
  - 이번 제3~4차 남북정상회담은 복원되는 ‘6.15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의 가능성을 제고
- 이번 「판문점 선언」의 숨은 코드는 ‘통일’
  - 「판문점 선언」의 명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밝히고 있지만, 본문에는 ‘통일’의 용어 사용이 제1조에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규정

- 분야별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정상간 핫라인 설치뿐 아니라 남북당국자가 개성지구 내에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초기형태의 남북연합 추진기구에 합의
- ※ 1972년의 ‘7.4공동성명’에 따라 총리급의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했던 경험을 참고

## ■ 「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 과제

### □ 동북아 차원

#### ●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수교의 가능성

-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1994.10), 북미 공동커뮤니케(2000.10.12.),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 10.3합의 등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북한에게 약속
-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안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한다는 원칙만을 확인했으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사급 외교관계도 논의 가능

#### ● 북·일 수교협상의 조기 재개 가능성

- 아베 총리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는 일본도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데 필요불가결하다”며 북한과의 대화의사 피력(4.11)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4.24 전화통화에서 요청한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을 둔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의사를 전달하자 김정은은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

## □ 남북관계 차원 -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

### ●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와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 과거 남북기본합의서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비준을 받았으나 국회의 동의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던 사례
- 따라서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또는 이를 토대로 남북이 합의해 작성한 「남북기본협정」(가칭)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조치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점진적인 확대 개편

-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7.4공동선언’의 이행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처럼 초보적인 남북연합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본격적인 남북연합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 □ 국내적 차원 - 국내적 냉전구조의 해체

### ● 북한의 국가적 실체 인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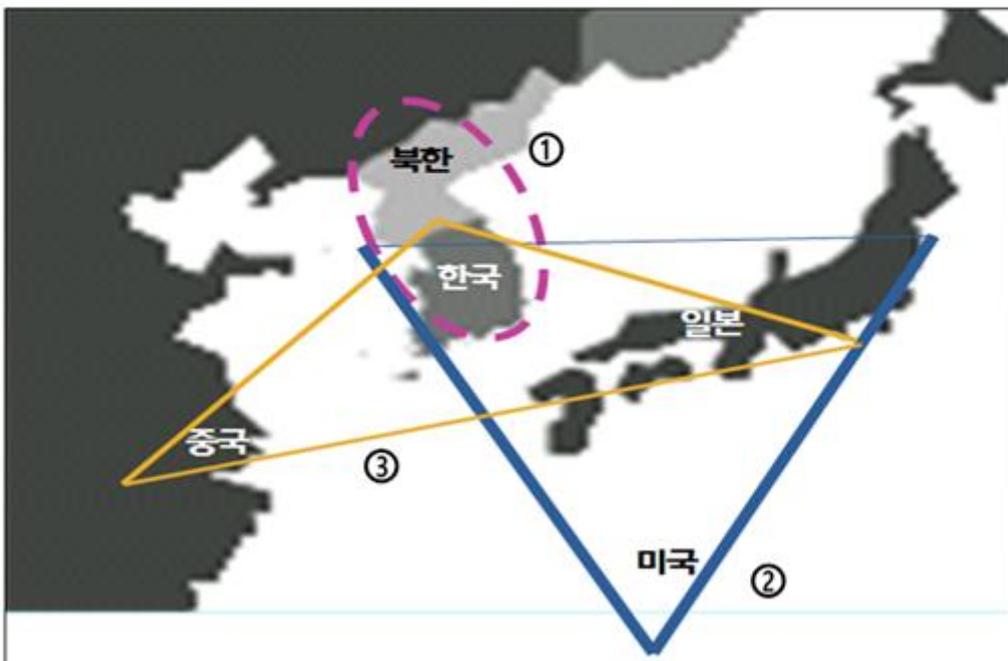
- 1945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한 195호는 그 동안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해석한 데 대한 재평가 논란
- 그러나 1991년 8월 남북한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함에 따라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종식

- 냉전구조의 유지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및 헌법의 영토조항, 그밖에 북측의 노동당 규약 등의 개폐 필요성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의 재검토 필요
  - 북한도 ‘남조선혁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필요

### 3-2 비핵화된 한반도 평화체제의 추진과 ‘남북 공동의 집’

#### ■ 한반도 냉전구조의 대외정책 구도와 대안적 구도

<그림 3-1> 한반도 운전자 외교전략에 따른 동북아 질서 관리틀



-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온 다자체제의 옹호를 포함해 국가이익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sup>1)</sup>)

-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따를 경우, 수직적 한·일 관계의 수평관계화도 어렵고, 모처럼 맞이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악화도 우려(<그림 3-1>의 ① 참조)
-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외정책 관리들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상충되고 한일관계 갈등이 불가피하며 남북관계의 안정은 기대하기 곤란(<그림 3-1>의 ② 참조)

## ■ 동북아 신평화질서의 수립과 ‘남북 공동의 집’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의 3> 처럼, 트랙 ①, ②, ③의 협력적 남북관계의 형성, 한·미·일 삼각관계의 재설정,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구축이 필요
  - 한반도 운전자 외교는 당면현안에 맞춰서 해결을 모색하는 입구론적 접근법 아니라 (최종,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출구론적 접근법을 채택
- 트랙 ① 외교: ‘남북 공동의 집’의 건축
  - 북한은 對中 무역의존도가 2016년말 기준 92.6%(KOTRA 통계)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엔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음
  -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면서 대남, 대미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전면적인 개혁·개방정책의

1) 스테판 헤거드, “한국은 미국·중국 눈치 보지 말라”, 『중앙일보』 2015년 7월 25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정치 및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

- 이를 위한 전략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고위급 및 각급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구로 확대 개편하여 판문점에 남북집행위원회를 설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또는 인접구역에 DMZ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 상설기관으로 남북집행위원회를 이전 설치

### ● 트랙 ② 외교: 한·미·일 삼각관계의 재설정

- 탈냉전시기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냉전시기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동맹 성격의 한·미·일 삼국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위험성 내포
- 냉전시대의 한·미·일 관계는 약소국가 한국이 미국의 안보우산·시장, 일본의 자본·기술을 얻기 위해 과거청산을 미봉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했으나, 중견국가 한국과 일본의 수평적 관계재설정이 필요
-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미·일 3국 관계가 일괴암적 지역동맹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이 연결된 전통적인 허브&스포크(Hub & Spoke) 관계의 유지가 바람직

### ● 트랙 ③ 외교: 한·중·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구축

- 일본이 동아시아질서를 중·일 양자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며 중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중국도 지역안정을 위해 강대국 일본을 무시할 수 없어 중·일 정상회담을 수용하며 관리
- 한국이 '동적 균형'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한·일 양자구도보다는 한·중·일 3자

협의구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동아시아질서 형성과정에서 중·일 양국 협력체제의 구축을 차단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한·중·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의 복원 및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성화)를 정상 가동

### 3-3 '남북 공동의 집' 구상과 추진전략

#### ■ '남북 공동의 집'과 평화통일

- '남북 공동의 집'은 향후 체결될 「남북기본협정」을 바탕으로 남북 평화·공존이 제도화된 '낮은 수준의 남북연합'의 형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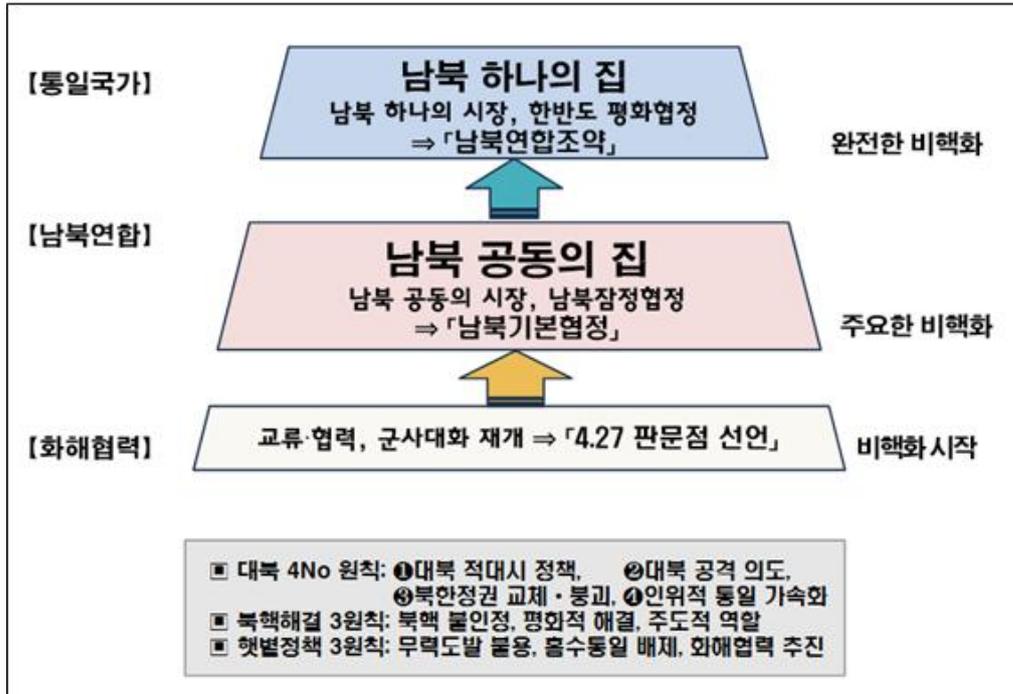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년 6개월 내에 북한의 주요한 비핵화(major nuclear disarmament)가 완료되면, '남북 공동의 집' 발족을 선포

- ※ 「남북기본협정」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착수하고 남북 및 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해 해상경계선과 외국군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사실상의 평화체제'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규범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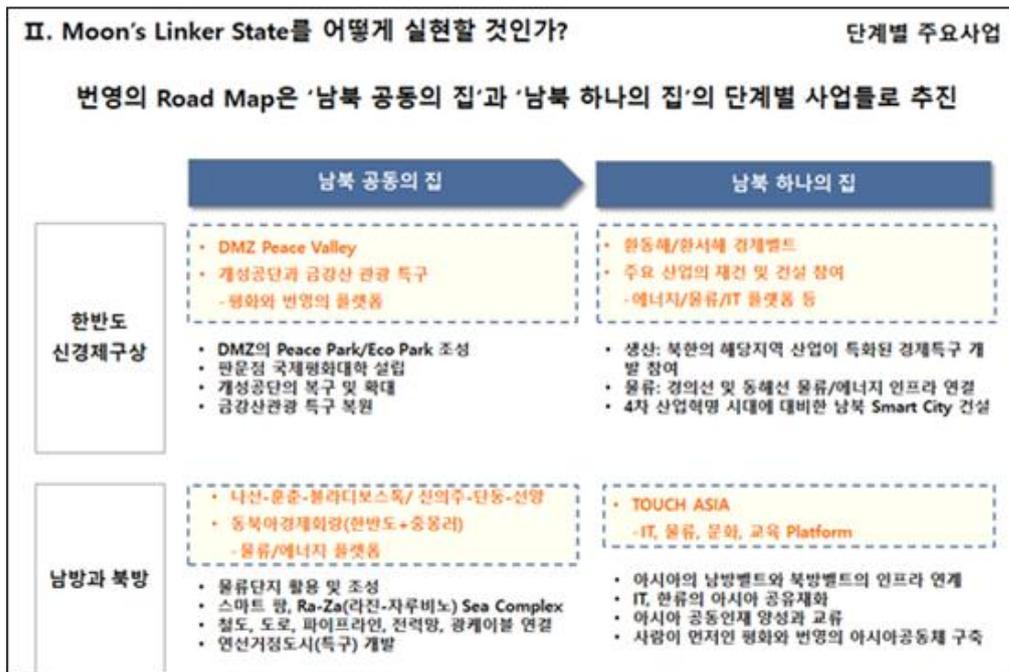
#### ● '남북 공동의 집' 구상과 평화통일

- '남북 공동의 집' 구상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국가통일)에 기초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남북연합에 해당
- '남북 공동의 집'은 남북 간의 정치, 경제, 안보 공동체가 진전됨에 따라 최종 통일상태인 '남북 하나의 집'으로 발전(<그림-2>참조)

<그림 3-2> '남북 공동의 집' 추진 구도



<그림 3-3> 공동의 집과 하나의 집 단계별 사업추진



## ■ ‘남북 공동의 집’과 1-3-1 추진계획

	기본방향	세부내용
1년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관문점 선언」	1. 남북한의 관계성 회복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2. 비핵화 협상 재개 - 북한 핵문제의 해결원칙 확립 3. 남북고위급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이하 각급 실무회의 연쇄 개최
2년차	<남북공동의 집> 건설	1. 남북한 군비통제 1) 우발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2) 군비통제(운용적, 구조적) - 서해 평화수역화(해상경계선 확정) 협상 개시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한반도군사구조 협상 개시 -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을 포함
3년차		2. 남북한 정치협상회의 -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집행위원회 확대개편 cf) 남북조절위원회, 10.4선언추진기구
4년차		3.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 한반도경제회랑(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1) 개성공단 재가동 2) 우리 기업의 북측 경제개발구 참여
		4. 한미동맹 2.0 1) 한미방위비협정 개정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미래사령부 발족
5년차	남북평화공존 공고화 및 「한반도 평화조약」 착수	5. 선린관계 재정립 1) 양자관계: 한일, 한중, 한러 2) 다자관계 - 새로운 방식의 동북아 협력체 (한중일 3국관계+ 미, 러, 몽 + 북한) - 한-ASEAN: IT, 항공우주, 원자력 협력 (한-인니, 한-베트남 시범사업) - 한-유라시아 가스·철도망, 전력망 협력 - 북극항로 개척(한-러, 노르웨이) - 동북아 경제회랑 및 개발은행(기금) 구상
		1.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완료 - 주요한 비핵화(major nuclear disarmament) 2. 전작권 전환완료 및 한미동맹의 재정립 3. <남북 공동의 집> 발족

## □ ‘남북 공동의 집’ 준비단계

-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채택 및 정상간 핫라인 가동
- 각급 대화채널 복원 및 통신선 복구, 동서해선 철도·도로 재연결
- 남북군사회담 및 각급의 남북대화 재개
  - 우발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 적십자회담, 철도회담, 삼림복구 회담 등 분야별 실무회담
- 복원된 남북관계를 규율할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

## □ ‘남북 공동의 집’ 건설 단계 - 낮은 수준의 남북연합

- ‘남북 공동의 집’을 법제화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개성 지역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확대 개편 (가칭)남북집행위원회를 설치
  - ‘남북 공동의 집’의 위치는 남북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또는 판문점 인접한 지역에 별도의 ‘DMZ평화생태공원’내에 조성
  - ※ ‘남북 공동의 집’은 평화통일의 초보적 공동체의 개념이자, 평화통일의 모판(seedbed)로서 평화생태공원과 같은 시범사업의 내용도 포함
- 군비통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남북군사회담) 및 모든 핵시설의 가동중단·봉인 및 불능화 실시

- 군비통제(운용적, 구조적): 서해 평화수역화(해상경계선 획정) 협상 개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한반도군사구조 협상 개시: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을 포함

●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 한반도경제회랑(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 개성공단 재가동
- 우리 기업의 북측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참여

□ ‘남북 공동의 집’의 심화 발전 - ‘남북 하나의 집’ 건설

● ‘남북 하나의 집’은 높은 수준의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유사하며, 상황전개에 따라 단일한 국가통일로 연결도 가능

● 남북연합의 실현: 집행기구(남북연합기구 설치) 및 법제화(한반도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한 한반도 군사구조 재편),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파기

■ ‘남북 공동의 집’의 확대 발전

□ ‘한민족 공동의 집’ 구상

● 한국을 중심으로 한 600만 명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남북 공동의 집’이 만들어질 경우 해외의

북한동포(단체)를 포괄하는 ‘한민족 공동의 집’으로 확대 발전이 필요

● ‘남북 공동의 집’ 추진과 한민족 네트워크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존의 재외동포재단과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를 적극 활용

- 재외동포재단(www.korean.net)은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여성네트워크, 재외한인과학자단체, 한글학교, 코리아페스티벌 등 재외한인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해외지역협의회(일본, 중국, 아세인, 미주, 유럽의 5개 해외지역회의와 122개국에 걸친 43개 해외지역협의회, 3,630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정부와 재외동포를 잇는 구심점 역할

□ ‘동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두 가지 시나리오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에 따라 등장하게 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재편의 방향을 ‘동아시아 공동의 집’으로 수렴

- 새롭게 만들어질 ‘동아시아 공동의 집’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규정될지에 따라 성격이 규정
- ※ 중국 외교부(2008.7):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기간에 한미전략동맹 선언(2008.4)을 논평하며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주장

● 제1시나리오: 미국이 기존의 허브&스포크(Hub & Spokes)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의 관계를 모색

- 한미동맹은 미래사령부 중심의 한반도방위동맹 및 글로벌 전략파트너로 재편하되, 특정국가를 적으로 삼는 한미일 지역동맹화에는 반대

- 제2시나리오: 한미 군사동맹을 정치동맹으로 재편하고,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를 형성
  -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넘어 주한미군의 최소한 주둔을 전제로 ‘미군 없는 한미 정치동맹’으로 재편
  - ※ 미 의회가 「2019회계년도 미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2,000명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 감축하고자 할 때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법제화해, ‘동아시아 공동의 집’은 제1→제2시나리오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4. 가교국가의 확장성 및 역내국들의 동북아 지역비전들과의 연관성

### 4-1 주변국들의 지역구상

#### ① 중국의 지역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북진흥전략

##### ■ 일대일로 전략구상(Belt & Road Initiative)

<그림: 일대일로와 6대 경제회랑>



#### ●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를 지칭하는 용어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제기한 중대 전략 구상
-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한 신실크로드 전략으로서 오늘날 중국의 중장기 국가대전략이자 지정학적 대구상
- 일대일로 연선국가(통과국)들과 함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TCR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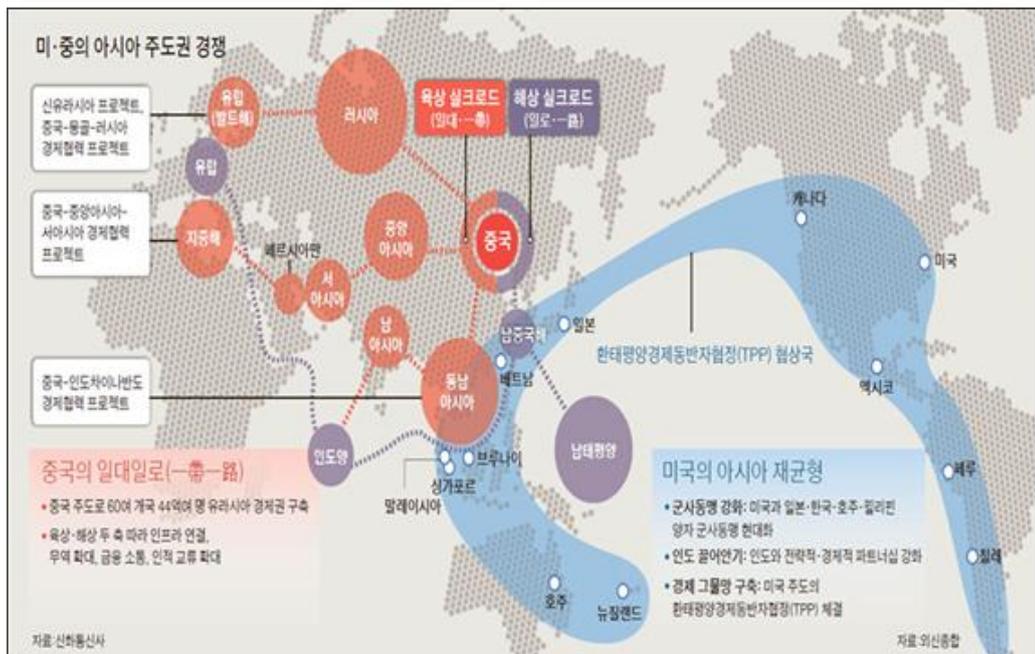
중국-인도차이나(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6대 경제회랑 건설을 적극 추진

- 최근에는 일대일로에 이어 한국을 거쳐 유럽, 북미로 연결하는 북극항로인 일도(一道) 개척을 추진

● 일대일로의 배경과 지전략적(geo-strategic) 의미

- 시진핑 집권 초기 동아시아에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대중국 인식이 악화되고, 이를 기회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 압박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이 추진
-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이 동맹강화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으로 본격화됨에 따른 전략적 대응조치로서 일대일로 전략구상이 고안

<그림: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일대일로>



-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의 전개에 부합하는 지경학적 환경의 조성뿐 아니라, 중국의 대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지정학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미: 충돌이 아닌 우회

- 중국 내부 의견: 해외투자 및 산업이전 등을 통한 과잉생산능력의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서부지역 등 변경지역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의 강화,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 확보
- 국내적 배경: 중고속성장의 뉴노멀시대를 맞아 도농 및 지역격차 해소와 해외진출을 통해 기존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과잉설비, 과잉생산, 과잉공급 문제 해결
- 국제적 배경: 뉴노멀 전개에 부합하는 안정적 외부환경 조성과 함께,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적 고려의 산물
- 미국의 유라시아에 대한 패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 개입과 아시아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여 슈퍼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대응조치
- 주변국과의 ‘정책소통’을 통해 구체적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상의하고(共商), 공동으로 건설하고(共建), 공동으로 향유하는(共享) 개방적, 호혜적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중국 주도의 지정학적, 패권적 색채를 희석
- 미국, 러시아, 인도 등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 견제를 제거하기 위해 이들과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의 강화도 추진
- 새로운 지정학적 접근으로서 표면상 안보적, 지정학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고, TPP보다 훨씬 느슨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인문교류’의 측면을 강조

## ● 일대일로 성과

- 일대일로 연선국가(통과국)들과 함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TCR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중남반도)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등 6대 경제회랑 건설을

## 적극 추진

-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위해 40여 개 국가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항만, 철도, 에너지자원, 산업단지 개발 등 전략적 협력프로젝트를 가동
- UN 대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 중요 결의 또한 일대일로 건설 내용을 포함
- 현재까지 '일대일로'의 조기수확으로는 1)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협력 의사를 밝혔고, 4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 체결, 2) 중국 주도의 AIIB가 공식 출범, 실크로드 기금 1차 투자사업도 본 궤도에 오름, 3) 중국-파키스탄,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금융,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초기 성과를 거둠, 4) 중국-유럽 블록트레인이 기 운영 중이며,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착공,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등 범아시아 철도망 건설 가속화 5) 과다르항, 피레우스항 등 유라시아 해상거점 확보를 위한 항만 건설 추진
- 30여 개 국가와 국제 산업 및 에너지협력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벨라루스 공업단지, 중국-인도 복합산업단지, 중국-카자흐스탄 휘얼거스 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라오스, 중국-베트남, 중국-몽골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진행 중. 그간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중국기업은 이미 20여 개 국가에서 56개의 경제무역협력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11억 달러의 세수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 일대일로의 한계

-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 등 강대국간 갈등은 물론이고 연선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민족 분리주의,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성행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직면
- 미국의 전략적 봉쇄, 일본의 전략적 교란, 인도의 전략적 비협조 등 강대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과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변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 무상원조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또는 경계심을 노출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우 오랫동안 국제테러리즘의 주요 온상지로서 아직도 반테러리즘 전쟁이 진행 중이며, 종교적 극단주의 및 민족 분리주의 세력과의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시 존재
-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체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개방과 발전과정에서 정치안정, 경제발전, 제도전환, 정책조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불리한 ‘高腐敗地帶’(high corruption belt), ‘高危險路’(high risk road)에 해당
-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체로 권위주의 통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나 관료부패가 매우 심각한 곳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치기에 용이
- 세계은행의 2015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우 대부분 기업설립이나 계약이행 등 10개 영역에서 최하위
- 더욱이 중국기업은 법률관념의 미비, 리스크 의식 부족, 낮은 현지화 정도, 사회책임의식 결여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국제화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해외투자 과정에서 해당 국가 및 민중의 저항이나 배척을 수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

## ■ 新東北 진흥전략(N-China)

### ● 개혁개방 이후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재건을 위해 후진타오 집권 시기 동북진흥전략을 수립, 추진

- 2003년부터 신흥공업화로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주요 목표 하에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 조정, 인프라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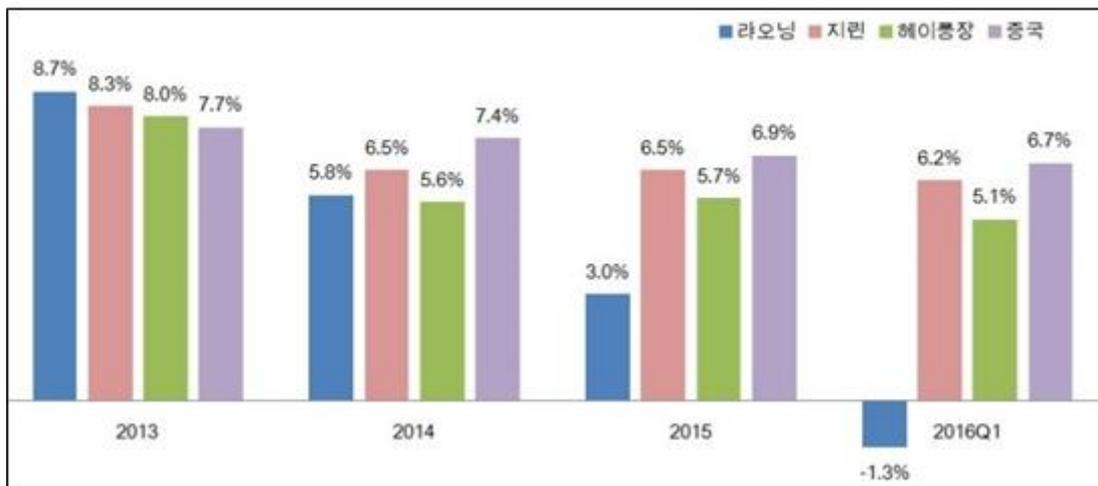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

- 동북진흥전략 실시 후 10년간 평균 성장률 12.6%로 전국 수준(10.5%)보다 2% 상회. 투자, 소비,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1년 이후 중속성장기의 뉴노멀(新常态)에 접어든 중국의 경우, 특히 동북지역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

- 2015년 중국경제에서 동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GRDP, 고정자산투자, 교역액, 외국인직접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그 비중이 축소
- 특히 2014년부터 중국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빠지는 '신동북현상' 초래(2016년 동북3성은 전국 최하위권, 특히 랴오닝성은 -3.0% 성장)

그림: 최근 동북3성 경제성장률 추이



● 시진핑정부는 이러한 동북지역 경제침체('신동북현상') 타파를 위한 조치로서, 2016년 신동북진흥전략과 관련한 세계의 중요한 정책문건 발표 등 동북지역 전면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 2016.4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全面振興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的若干意見) : 2030년까지 동북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장비 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재료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및 중요 기술혁신 및 R&D 기지로 발전
- 2016.8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추진을 위한 3년 연동계획 실시방안 (推動東北地區等老工業基地振興三年滾動實施方案)」 : 국유기업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향후 약 232조원 규모의 130여 개 프로젝트 진행 예정
- 2016.11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요조치에 관한 의견 (進入推進實施新一輪東北振興戰略加快推動東北地區經濟企穩向好若干重要舉措的意見) : 국유기업 개혁, 신형산업 육성, 민간창업 등 총 14개 개혁조치 제시

● **향후(13차 5개년 계획기간 2016-2020) 신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시기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일대일로, 특히 그 가운데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을 매개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며, 동북3성 각기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나갈 것임**

- 지린성은 동쪽으로 차항출해(借港出海)를 활용한 동북아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몽골,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수송로[프리모리예2: (몽골) 울란바토르 - 초이발산 - (중국) 아얼산 - 바이칭 - 창춘 - 지린 - 훈춘 - (러시아) 자루비노] 연결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은 중몽러 경제회랑 헤이룽장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을 추진하여 러시아와의 4개 국경연결철도 노선 개발 및 TSR 연계/ 부산 -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항 - 쉬펀허 - 하얼빈 - 만저우리 - TSR 연계(프리모리예1) 복합운송노선 개발 추진

## ②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전략

### ■ 신동방정책

#### ● 유라시아 통합과 새로운 지정학의 공간

-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조되는 지정학적 공간이 발견
- 더욱 ‘적극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동북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표명
- 유라시아권 전체의 정치·경제적 통합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유럽과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전략벨트의 중심축으로 러시아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

그림. 러시아의 지역구상: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

사업(철도)	위치
① 중앙노선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복선 및 전기화) (UlaanUde-Naushki-Sukhbaatar-Ulaanbaatar-ZaminUud-얼렌호터 - 초평-베이징-톈진)	
② 북부노선(Kurangino-Kyzyl-Arts Surri-Ovoot-Zaminin Uud-얼렌호터-울란차부-장자커우-베이징-톈진) 착수 조사	
③ 서부노선(Kurangino-Kyzyl-TasagaanTolgoi-ArtsSuui - Khovd-Takashiken-Haxi Prefecture-우루무치) 착수 조사	
④ 동부노선(Borzya-Choibalsan-Khuut-Bidhigt-주연가다부차-초평-진저우) 착수 조사	
⑤ 프리모리예 II(두만강철도노선) 확장 프로젝트 착수 조사(Choibalsan-Sumber-Rashaan-우란호터-창춘-엔자-자루비노)	
⑥ 프리모리예 I 확장 프로젝트 착수조사(Choibalsan-Sumber-Rashaan-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	

#### ● 극동지역의 개발과 아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12월 연례교서를 통해 21세기 러시아의 발전은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잠재력 실현에 달려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지역에서 가치 있는 위상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2013년 12월 연례교서에서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이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적 우선과제이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러시아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실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강조

※‘러시아 대외정책개념’에서 러시아는 세계정치·경제의 무게중심이 아태지역으로 교체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 지역의 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있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천명

## ● 신동방정책의 배경

- ‘신동방정책’으로 표현되는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대외정책노선은 현재 러시아에게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가치에서 출발
- 과거의 동방정책이 유럽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견제적 측면의 ‘기능적 균형전략’의 일환이었다면, 현재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지정학적 전략균형의 차원을 넘어 정치,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포괄적 집중전략’으로 진화
-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이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전략적·지경학적 공간으로 부상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변화하는 지역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익을 실현해야 할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 ● 도전과 기회로서의 ‘동방’

- 러시아의 관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정세는 ‘도전’과 ‘기회’의 양면적 성격

- 러시아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상대적 위상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하게 다져나감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한편, G2 체제의 등장 이후 격화된 미-중 및 중-일 간의 경쟁 국면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경제개발 및 아태지역 편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화된 세력 경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새롭게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기회의 창’으로 발현
-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도 이러한 측면은 잠복
-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이고, 지금까지 양국은 내재된 갈등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와 안보 이익을 결합하는 능력을 과시
- 국경을 접한 양국은 접경지역 및 지역개발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계획과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 그러나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제협력구조에 내재된 후진적 성격이 심화되고, 중국 편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며, 역내 지정학적 자산이 침식되는 것을 우려

## ● 신동방정책은 딜레마 해결 전략

- ‘신동방정책’ 노선은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의 시도
- 과거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인접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국인들의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불법이주 등 ‘조용한 침투’를 단순하게 ‘중국위협론’에 기대어 수세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중국 외에도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등 인접한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더불어 이 지역에서 분출되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흡입함으로써 낙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으로 표출

## ■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

- 「극동 자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이전의 계획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을 재정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동으로 표출
  - 2009년 12월 28일 「러시아연방 장기사회경제발전개념 2020」에 맞추어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큰 열개와 최우선적 방향을 설정하는 「극동 자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2025」을 수립
  - 2011년 11월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대외경제은행(Vnesheconombank)을 통해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펀드(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연방정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신설
  -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러시아정부는 2013년 3월 말 다시 2025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교통, 에너지, 사회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이하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
  
- 극동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의 관리 감독체제 확립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극동지역의 지역개발을 직접 지휘하고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도 천명. 2012년 5월부터 푸틴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던 유리 트루트네프를 2013년 8월 31일부터 극동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 겸 부총리로 격상해

임명했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극동개발부 장관에는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비즈니스 러시아’의 공동대표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를 임명

## ● 대외경제 악화에도 극동 지역개발은 지속 사업

-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등 대외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극동지역 개발 국가프로그램의 개정과 사업규모의 축소 등 극동지역 개발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지원은 지속 사업
- 중장기적으로는 정반대로 극동지역 개발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고립을 피할 지정학적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다른 아난 동북아시아를 중핵으로 하는 아태지역이 그 대상지역으로 판단
-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고, 경제현대화가 시급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전략적인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

## ● 아태지역 주변국들의 극동지역 개발 진출 가속화

- 중국은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앞세우고 거대한 물리적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극동지역에 진출하면서, 중-러 투자펀드의 설립부터 농업·임업·기계제조·물류·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서 인프라(항만, 공항, 도로, 교량, 철도건설) 구축, 산업단지 조성, 농업개발, 관광개발, 통신망 구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투자협력을 진행
- 일본은 쿠릴열도 영토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 등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용한 가운데 실리를 추구하며 극동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

- 이처럼 주변국들이 대규모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도 이 지역으로 개발 진출을 본격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 지금까지는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대러 극동투자는 관망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러 극동투자 진출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한국도 한-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공감대가 확산

### ● 극동개발 전담기구 체계화

- 최근 러시아는 극동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증대하기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과감한 개방’과 함께 극동투자유치청의 설립, 극동개발펀드, 극동인력개발청, 극동개발공사 등 전담기구들의 체계화를 진행

<그림: 러시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 ● 극동 투자플랫폼 육성 및 투자보장법

- 극동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 정부가 주로 개발프로그램에 자체

예산을 배정하는 식이었으나 이제는 연방법으로 투자환경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장기적인 산업투자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 법제도의 미비 등이 기업인들의 불만사항이었는데 최근에는 입법과정도 신속하게 진행. 현재 대표적인 2개의 연방법이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 일부에서는 이 신규 입법이 투자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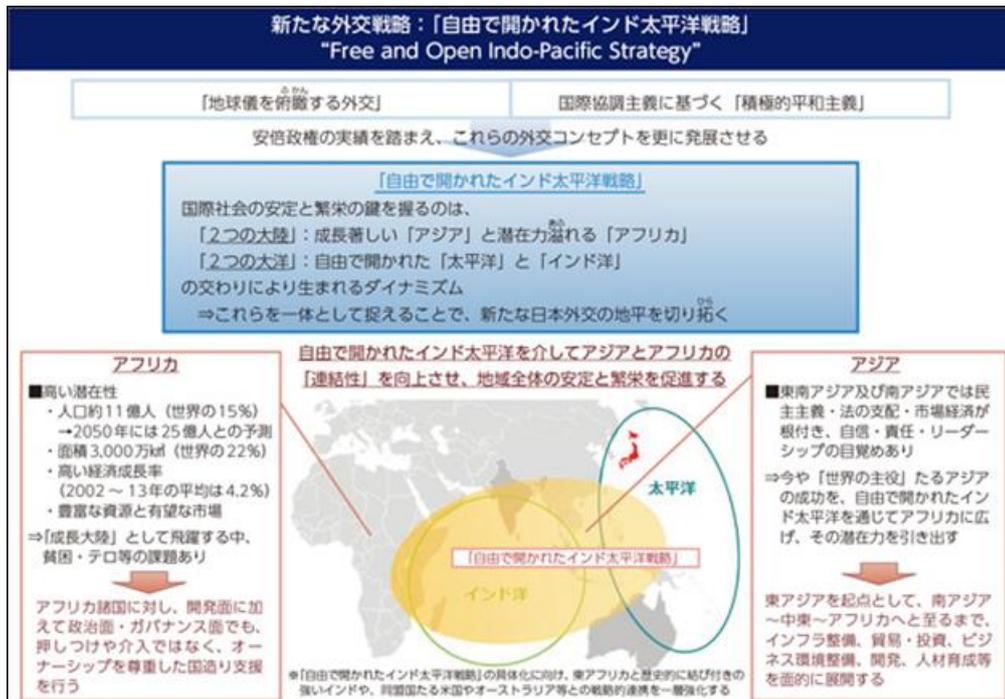
### ③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랑

#### ■ 인도-태평양 구상

##### ● 인도-태평양 구상의 내용

- 일본 외교백서 2017년 판, 「특집,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
- 2016년 8월27~28일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에서의 기조연설을 기회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
-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중요지역으로 규정하고, 2개 지역을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연결한 지역 전체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자유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여 경제권을 확대하는 것.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도 그 목표 중에 하나.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 (닛케이신문, 2017.10.26.)
-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구상.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인프라 정비, 무역 및 투자, 비즈니스 환경정비, 개발, 인재육성 등을 면으로 전개함과 함께 아프리카

- 국가들에 대해 개발 면에 더해 정치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강요나 개입이 아닌, ‘오너십’을 존중한 국가건설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임
-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아프리카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도, 동맹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 특히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 이로부터 이 전략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음
  - 2016년 11월 모디 수상 방일,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을 연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공유.



<『外交青書』2017年版, 「특집,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원

(1) ‘두 개 바다의 접촉’ 연설

- 2007년 8월, 아베가 인도를 방문하여 ‘두 개 바다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연설. 아베 제1차 내각 때, 일본은 ‘자유와 번영의 호’ 라는

- 이름으로 ‘가치관 외교’를 표방. ‘가치관 외교’는 “보편적 가치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시장경제)에 기초한 외교”
- 「자유와 번영의 호」는 “유라시아 대륙에 따라 자유의 고리를 확대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라 규정됨
  - ※ 2006년 11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아소 타로 당시 외상의 연설이 출발: 당시 미국은 이 지역을 ‘불안정의 호’로 부름. 이에 대응하여 「자유와 번영의 호」는 “동쪽의 미국, 호주, 중앙의 인도, 서쪽의 EU, NATO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목표로 설정. “가치관의 강요나 체제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각국의 문화와 역사, 발전단계의 차이에 배려”하면서 “개발협력과 다국 간 안전보장협력을 연계하는 외교 전략”이 그 내용
  - 아베는 「자유와 번영의 호」가 아소 타로의 발명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은 계승하면서도 용어를 기피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구상이 등장
  - ※ 2007년 8월 인도의회에서 아베의 ‘두 개 바다의 접촉’ 연설은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일-인도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치관 외교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 2) 일-인도는 해양국가로서 함께 해양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비롯한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연; 3) 일-인도의 연계로 만들어지는 ‘확대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을 끌어들이며 태평양까지 이르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것이 FOIP의 맹아)
  - 2013년 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실시예정이던 연설의 원고, 「열린 바다의 혜택: 일본 외교의 새로운 5원칙」에서 구체화
  - 2016년 11월 모디-아베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과 호응할 뜻 강조
  - 미국이 인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은 힐러슨 국무장관이 2017년 10월 18일 CSIS에서의 강연에서 미인 양국이 지역안정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이 ‘약탈경제’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 힐러슨 장관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명시적 등장

- 인도는 이를 중국이 스리랑카 등에서 고금리 용자로 개발지원하면서, 항만 권익을 따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산케이뉴스, 인터넷판, 2017.11.16.)
-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 일대일로 구상에 반발하는 인도가 이를 환영
- 2018년 3월 30일에도 아베는 인도 스와라지 외상과 회담하여,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관계 강화 방침 재확인: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피력. 스와라지 외상은 올해 안에 모디 수상의 방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함

## (2) ‘안보 사각형(Security diamond)’구상

- 아베가, 2012년 Project Syndicate에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논문 발표: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 호주, 미국 하와이 등 2개 국가와 1개 지역을 연결하는 4각형으로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진출을 억지한다는 것인데, 조어도 영유문제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루트(sea lane)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
- 일본-미국-호주-인도가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으로 펼쳐지는 해양 공공재를 방위하는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전략”이라는 구상에 대중전략으로서 성격이 제시
- 이 구상에 입각해 일본은 2015년 12월, 인도 및 호주와 각각 공동성명 발표: 일본이 인도 및 호주 등 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재균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위압적, 일방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

## ● 인도-태평양 구상과 미국

- 2017년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 미일이 주도해서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이하 3개 중심축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 1)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가치의 보급

- 미 정착; 2) 연결성 향상 등에 의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3) 해상법 집행능력 구축 지원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2016년 9월 2일, '인도양 회의 2016'에서 기시 외무성 부장관 연설에서 2014년 5월 30일 상그릴라 대화에서의 아베 기조연설을 인용하여 바다에서의 법의 지배의 확보를 강조.
- 2017년 3월 7일, 환인도양 연합(IORA) 정상회담에서 기시 외무성 부장관이 연설. FOIP의 3개의 시책을 설명하면서, '해상법 집행능력 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순시선의 공여와 기술협력' 등을 상정
- 고노 외상의 콜롬비아대학 연설에서도, "순시선 공여와 기술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해상법 집행 능력의 향상을 지원한다"고 언급. 이는 한편 '법의 지배'의 문맥에서도 언급된 것이며, 그러한 내용으로도 이해됨. 그런 의미에서 (1)과 (3)은 상통하는 내용
-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의 APEC CEO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연에서, FOIP에 기초해서 이 지역에 대한 명백한 관여정책 표명
-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도 미·일·호·인 4개국 대화의 재개를 위한 외교당국자 간 움직임 포착
-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전략 NSS에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종래의 표현 대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됨
- 2018년 1월 22일 아베의 시정방침연설: FOIP의 강력한 추진 방침을 표명.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외교의 핵심 목표가 됨

## ●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 본 구상과 전략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 언론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데 중국 정책의 성격을 강조하는 데 대해, 정작 아베 본인은, 특히 올해 들어 2018년 1월의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큰 방향성 아래, 중국과도 협력하여'이라고 하여, 중국견제용 성격을 희석

- 인도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구상의 제창자 중 한 사람인 Gurpreet S. Khurana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해서 “장래 중국을 포함한 형태로 공통의 번영을 지향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연구자 C Raja Mohan은 싱가포르국립대학 남아시아연구소(ISAS)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공격적인 전략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
-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담 중 열린 중일정상회담에서, 중일 양 정상은, “일대일로를 포함해 중일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어떻게 공헌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 나갈 것”에 대해 인식 공유(이는 일대일로에 대해 일본이 조건부로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됨)
- 2017년 6월 5일에는, 아베 강연, 일대일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과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일본이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 피력
- 2018년 1월 22일, 아베 수상 시정방침연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서, 중국과도 협력하여, 증대하는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커다란 책임을 지니는, 자르려 해도 자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 ●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 11월 8일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축”이라는 표현이 들어감. 직후 김현철 보좌관이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

## ●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동향

- 아베의 발언: 2018년 6월 11일 국제교류회의 ‘아시아의 미래’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잘 인식하여 미래를 향해 올바른 길로 큰 일보를 내딛기를

염원한다”고 발언하였고, “북한이라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가 연결된다는 것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의 비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발언

-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지원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국민 합쳐서 500억 달러(약 5조 5천억엔)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명
- 6월 21일 아베,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과 회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

## ■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 ● 연원과 배경

- 2011년 7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도 첸나이에서 거행된 제2차 미·인도 전략대화에서 소위 ‘신실크로드 구상(the New Silk Road Initiative)’을 처음으로 제기
- 같은 해 10월에 미 국무부는 이 전략구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정책을 통일적으로 정리하여 이른바 ‘신실크로드 전략’이라 명명
- 이 구상은 2014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주변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무역통상과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통해 이 지역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됨

### ●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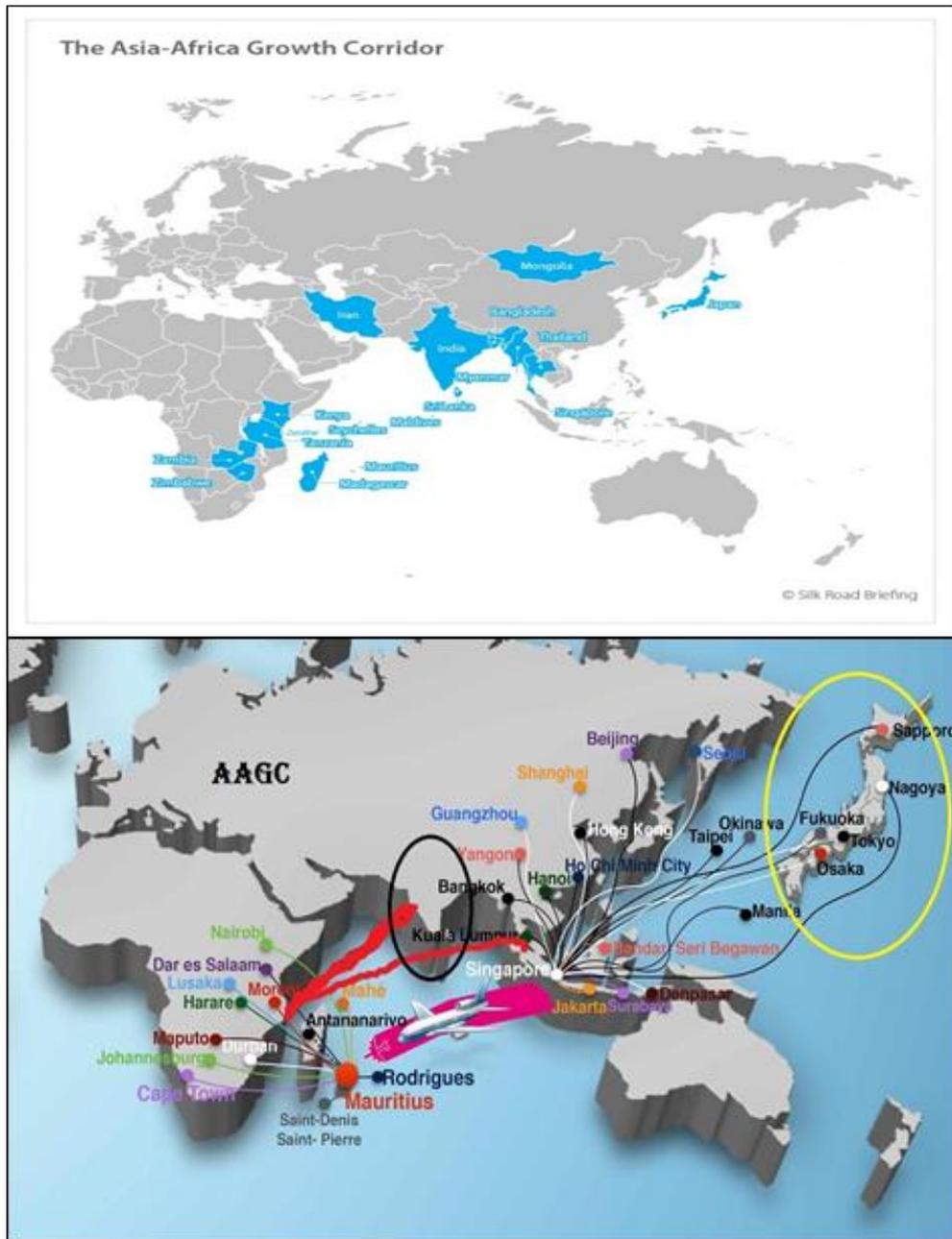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계시키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그 주요 내용이 집약됨
- 첫째, 지역 에너지 시장: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에너지 자원, 가령 석유, 가스, 수력 자원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거대한 수요처인 남아시아로 수송하는 CASA-1000 수력자원 프로젝트

- 둘째, 무역과 수송: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사이의 무역과 통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 즉 도로, 철도, 다리, 국경통관 시설 등의 개선
  - 셋째, 세관과 국경 통관 절차: 지역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경 통과 및 통관검역시간 단축, 불법 및 위험 물질의 거래 금지에 노력
  - 넷째, 비즈니스 및 인적 교류: 중앙아시아 학생 지원,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 여성경제 심포지엄, 남아시아 여성기업인 심포지엄 등 지원
- ※‘신실크로드 전략’의 목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 에너지, 운송, 무역, 그리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을 제공하고, 아프가니스탄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TAPI, CASA-1000이 있음

## ■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이란?: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Asia-Africa Growth Corridor)은 인도와 일본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협력프로젝트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특히 중국 주도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함. 즉 인도와 일본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맞대응

<그림: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인도의 언론매체에서는 인도와 일본이 협력하여 '자유회랑 (Freedom Corridor)'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아프리카, 이란, 스리랑카, 동남아 등을 포괄하는 여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선보임
- 자유회랑에 대한 여러 추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7년 5월 23일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회의에서 AAGC를

언급하며 인도가 일본 및 미국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그 후 인도와 일본이 공동으로 AAGC 비전과 관련한 문건을 공표함

## ●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의 배경과 의미

- AAGC 개념은 비록 생소하지만 2016년 11월 인도 모디 총리의 방일 기간 이미 일본의 아베와 논의한 바 있음
- 인도와 일본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이익 및 각자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경제사회, 역량구축, 연계소통, 기초인프라 등에서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는데 동의
- 이들은 또한 동남아, 남아시아 및 이란, 아프간 등 인근지역의 협력전망을 논의하고 아프리카를 협력의 우선 사항으로 설정
- 2014년 집권 이후 모디 총리는 인프라 건설방면에서 매우 적극적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미 일본이 인도 국내의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비준한 것 외에도 철도노선을 통해 이란의 차바하르항(Chabahar Port)과 아프간 변경을 상호 연계하고, 사이셸(Seychelles)의 조차지를 발전목표에 맞추어 사용하며, 아프리카 동부의 마우리티우스 군도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스리랑카의 초대형 경제프로젝트 건설 추진을 계획

## ● 성과와 한계

- 인도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자금의 결핍이었으며, 이것이 일본의 장점인 풍부한 자금과 고품질의 기초인프라 건설 노하우와 결합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됨: 일본의 자본과 기술, 인도의 인력과 현지 경험을 결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기초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기로 합의
- 현재 AAGC 프로젝트 연구는 이미 시작되어 비전 문건과 관련 업무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의 3개 싱크탱크에서 공동으로 진행되었음

- AAGC는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우선국가와 우선 프로젝트를 확정할 예정: 1단계는 인도양 연안국가의 중요성과 양자 파트너십 관계 등의 요소에 의거하여 아프리카 동해연안의 7개 국가를 확정(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이 외에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가능한 후보국가임. 2단계는 부단히 확대된 관계망의 일부분으로서 서인도양 도서국인 마다가스카르, 마우리티우스, 사이셸, 코모루 등 도서국가 등이 인도와 일본의 협력파트너십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짐. 다음 단계에서는 아프리카 서해안 특히 코르티부와, 가나, 감비아 3개국이 접촉의 중점 대상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국가 내부에서 노동자 및 자원 착취, 신식민주의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도와 일본이 추진하는 AAGC가 추진하는 비권위적이고 비간섭적 개발모델이 보다 공정한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음
- 하지만 AAGC는 현재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현 가능성과 전망은 앞으로 지켜봐야 함.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상호 이해관계 일치의 불완전성과 대상국인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를 야기함으로써 지역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함

#### 4-2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남방, 신북방)의 연결

##### ●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연결시키는 통합전략

-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의 핵심이었던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남방, 신북방, 동북아평화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재부각하는 동시에 연계전략 개발 필요
-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에도 불구하고 정권출범 이후 북방경제위원회의 독립적인 설립과 함께 각 부처로 산개되어버린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재결합해서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 제시

※ 현재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확대 개편의 필요성

● **역내강대국들의 지역비전들이 한국의 배타적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이용하여 진영논리를 약화시키고, 협력분위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기존 지역비전들을 연결하는 모듈 역할의 중요성 부각**

- 동북아강대국의 지역비전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입지 확대 필요
-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배타적 선택구도보다 한국이 이 두 가지 구상이 가진 경제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편승 또는 연결시키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

● **미래를 위한 중장기 평화구축 비전은 신성장동력 개발전략과 연계 필요**

- 환동해권, 환황해권, 휴전선이 만들어내는 'H'형태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함께 적극적인 남북화해정책을 통해 한반도위기를 극복하고,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로 향하는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 호주로 가는 신남방정책으로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우회하는 종합적 청사진 필요
-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와 다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역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주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음

■ **한반도 및 아시아 링크구상: 동북아 경제회랑과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 **의미와 필요성**

-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북방, 남방과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호혜의 단일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공간 확보와 동반성장은 물론이고 잔존하는 냉전적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에 내재된 Link S-N 1(남북한 연계) 실현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에 내재된 Link S-N 2(신남방+신북방 연계)의 연계를 위해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 아시아를 한국의 외교역량이 투사되는 전략적 협력 공간으로서, 과거 북방정책과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 등으로 한반도의 분절선을 넘어 대륙으로 향하던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아세안 및 인도의 성장잠재력의 공동 발화자로서 해양과 대륙을 포괄하는 해륙복합외교 전개

## ● 문제의식과 방향

- 우리에게 잃어버린 유라시아 대륙의 DNA를 복원하고, 해양적 우위를 활용한 지경학적 접근법으로서 동북아 경제회랑과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의 내용과 대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 중국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 전략구상에 내재된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대척점에서 중국 중심의 세력균형 시도로 비취질 수 있는 힘의 투사를 벗겨내고, 계층 및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발전모델 제시 유도
- 미국 및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봉쇄하려는 패권적 관성에 의한 동맹체제 강화와 같은 갈등고조 방식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역동적 발전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발화시키는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재조정
- 중국의 ‘일대일로’ 외에도 러시아의 ‘범유라시아벨트(Trans-Eurasian Belt RAZVITIE)’, 미국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일본 및 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Asia-Africa Growth Corridor)'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제고하여 대륙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연계구상의 실제적 내용과 로드맵,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전략적 우위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 입안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연결시키는 통합전략**



■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3-N 신북방협력 구조**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축, 서해축, DMZ 접경지대축으로 표현되는 H-形



<기존의 X형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H-형 설정은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 구상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논의에서 제기된 프레임의 재구성이자 확장판(version-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H-형 지도 설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함축
  - 첫째, 남북협력과 지역협력을 통합적 구조에서 사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둘째, H-형의 설정은 남북경제협력 및 대외경제협력 전략을 중장기 국토개발 구도와 연계 통합하는 전략적 사고
  - 셋째, 종래의 통일한반도 협력 구도가 남북의 인프라 연결 및 배치에 집중된 X-形의 구조를 설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는 내륙보다는 연안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해륙복합(海陸複合) 벡터로 접근

● 접근 전략에서 ‘경제통일’과 ‘시장접근’의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 8. 21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언급

-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시장경제 확산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설명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라는 구호 자체가 증거하고 있듯이,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단일 시장’으로서 경제의 통합적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통합의 최대 공약수이자 접근 방법으로써 ‘시장’협력을 전면화하겠다는 구상

### ● ‘경제통일’의 단계적 접근성 강조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통일’과 관련하여 ‘시장경제 확산’을 강조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와 관련해 2017년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현시점에서 부정적인 입장 천명

### ● ‘단계적 접근성’의 독법

- 첫째, 핵(제재)문제 해결과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오늘날의 북한과 개발 과정에 있었던 과거 북한과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
- 둘째, 국제사회와의 추진 공감대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의 퍼주기 프레임 극복을 위한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내외 공감대

- 형성을 전제로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조율하겠다는 구상
- 셋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협력지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축을 기본으로 점-선-면으로 협력거점을 상호 연결하는 확대발전전략 구상
  - 넷째, 세부실행과제와 관련해서는 대화 분위기 조성 단계와 남북대화 병행 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접근 구상.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하에서도 실행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면서 국면 전환과 함께 남북대화로의 전면적인 발전 시도

##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평가

- 한국의 그랜드 국가발전전략으로 남북한과 주변지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국가와 함께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평가
  -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이 동시에 제시된 균형적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평가
-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연계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단순한 남북교류와 협력 범주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산업구조개혁전략, ▲대외경제전략, ▲지전략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략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국정철학, 즉 신북방, 신남방정책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해야만 국가전략의 핵심목표와 방향



전략으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활용해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제3의 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함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였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데 진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의 공간인 동북아는 물론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아시아, 유라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를 적극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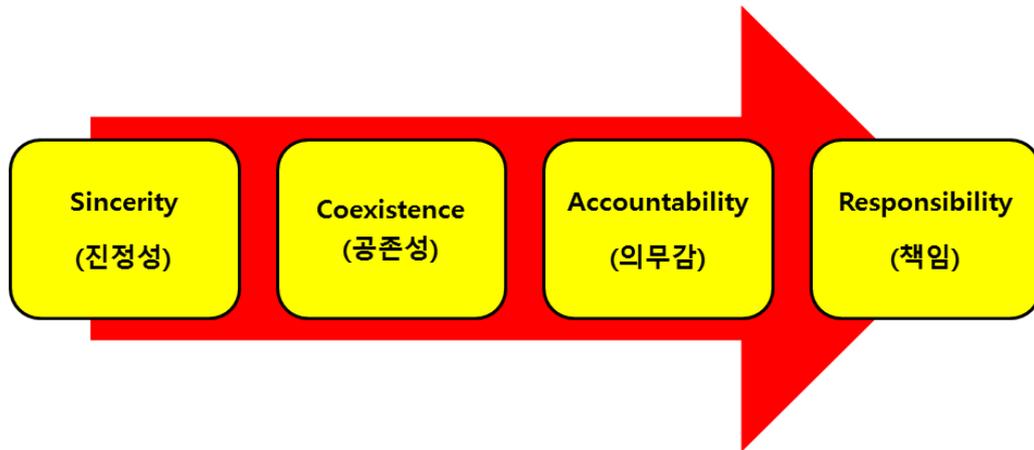
● 플러스의 의미: ‘플러스’란 ▲공간적 확장, ▲이슈 영역의 확대,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정책구상의 발전적 계승을 의미

- (공간적 확장) 동북아가 한국의 생존이 달린 핵심지역이며 최우선 순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동북아의 틀에 갇혀 버릴 경우 안보딜레마와 진영 대결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 몽골, 인도, 호주, 러시아, 유럽까지 협력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유연성 견지
- (이슈의 확대) 단순히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공영과 사회문화, 가치·공공외교의 차원까지 포함
- (동북아시대 업그레이드)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

● 책임의 의미

- ‘책임’은 책임국방, 국민안전 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등 현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서, 지역비전에서도 재차 강조
- 책임이란, ▲진정성,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 ▲책임 있는 기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로의 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
- 책임의 4가지 함의

※ 진정성(Sincerity):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외교 담론이나 허황된 상상의 담론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구상



- ※ **공존(Coexistence)**: 구동존이의 정신으로 같음을 추구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구하는 공동체
- ※ **의무(Accountability)**: 동북아플러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현존하는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책임을 가진 주체일 것을 촉구함
- ※ **책임(Responsibility)**: 동북아플러스는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향후 참여국들이 전쟁방지와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질서 구축이라는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체(목표)
- ※ **책임의 4가지 함의는 단계 및 과정** : 국내정치에서 안보나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말할 때는 곧바로 최종단계인 법적 책임의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낮은 단계인 진정성이나 공존의 수준에서 시작, 이후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의무와 책임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제정치학의 국제레짐이론 적용)

## 대통령 책임 관련 언급 내용

- (16.12.26. 후보시절 연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음.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임.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함.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옴. 3국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임.
- (17.6.1.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축사)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임.
  - ▲미·중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인도,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 ▲북한의 도발은 강력 응징

## □ 전략공간의 확장으로서 신북방정책

- 정책의 지속성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한계 극복
  - 유라시아지역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라시아'가 유럽까지 포함하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도출에 한계
  - 유라시아 대륙 내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주도의 '신동방정책'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인 '누를리 줄(Nurly Zhol)', 몽골의 '초원의 길' 등)과의 정책적 연계는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있어 한계를 노정
- 전략공간의 확장으로서 북방지역

- 한국이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지향한다면(해륙복합국가) 일차적으로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백터의 전환과 집중이 필요
-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지렛대이자 통로로서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협력 필요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공간이자 대서양주의에 도전하는 유라시아주의 및 신대륙주의에 부응하는 경제 공간으로서 북방지역 개척 필요

-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 세계 교역의 마이너스 성장,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극복
- 한반도 접경 주요국들이 나후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흐름(중국의 신동북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극동지역개발,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등)을 활용할 필요
-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끝나고 패권이 이동하는 ‘균열하는’ 세계질서에서 중, 러 북방국가들이 SCO와 EAEU간 전략적 유대강화 및 공동 경제 공간을 지향하고, 미국의 Reverse Nixon Policy, 연아제화(聯俄制華)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방의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가 유라시아 경제 공간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필요
- 한, 중, 러 3국의 이해관계가 중첩(한반도 新경제지도/新북방정책, 新동북진흥전략, 新동방정책)되고 접속되는 공간이 열리고 있으며, 이 모든 공간이 북한을 매개로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H-形’구조의 한반도신경제지도와 ‘3-N’의 중첩지대를 고려한 북방경제협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질적인 요소

● 신북방정책의 목표와 비전

-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공간을 확보하고 공동번영 도모
-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KOR-EURASIAN

BELT로 확장

- 신남방정책과 함께 대륙-해양 복합국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 차세대 먹거리를 견인할 경제성장 동력 확보
- 한국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몽골, 인도 등과 연대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링커 국가(Linker State) 역할

## ■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중국-한반도 경제회랑,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 ● 선(線)에서 벨트로

- 유라시아 실크로드 동단(동북아)에 중국-한반도,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2+4의 협력구도 실현
- AIIB의 적극적 활용과 미국, 일본(유럽 포함)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개발은행(예:NEADB) 실현 가능성 모색
- 동북아 경제회랑은 중국의 일대일로(중몽러 경제회랑)와 신동북진흥전략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신동방정책(극동연해주 개발전략), 몽골의 트랜짓 몽골리아 및 초원길 이니셔티브 등이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서로 연동되어 다수의 경제회랑을 구축
-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라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및 단동 연강발전계획,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황해권 벨트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중국-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
- 동단인 두만강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동해권 벨트계획이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러시아-한반도 경제회랑을 구축



##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 과거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와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논의 또한 중단되었음
-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논의의 진전에 따라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협력방안으로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연계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구축의 가능성에 새로운 동력과 모멘텀이 확보됨
-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훈춘 프로젝트의 상호 결합을 통해 기존의 남북러 3자 협력구도를 남북중러 4자 협력구도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미일을 포함한 6자구도의 협력 복원을 위한 매개로 활용될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패권과 갈등의 전통적 지정학적 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을 연계하는 링커 국가(Linker State)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해양과 대륙을 모두 품어 안는 실질적이고 유력한 지전략적 접근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 신남방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매개로 강대국간 지정학적 신거대게임(a new great game)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ASEAN, 중앙아시아, 인도, 몽골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독자적 세력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유라시아 실크로드포럼(가칭)의 결성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TEBR, 미국의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인도 및 일본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단계별 공동구축
- ASEAN, 중앙아시아, 몽골, 인도 등과 연대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동구축을 위한 기본적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독자적 계획을 상호 링크하여 하나의 통합적 계획으로 견인, 추동

## 5.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 제안

### 5-1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 심화

- 정치적 다자 협력만큼 한국과 북한 나아가 동북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의 크고 작은 경제적 협력은 소위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을 심화시켜,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임
- 특히,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천명하고 ‘경제 제일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더불어 번영을 촉진할 것임
  -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

### ■ 어떤 경제협력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핵심사업 선정 기준

- 실현 가능성과 가시적 효과는 있는가?
  - UN 제재의 현실을 고려하고 변화를 전망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임. 참고로 2017년 8월에 UN 안정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UNSCR 2371)는 현재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를 금지하고 있음
  - 참여국가들의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여, ‘번영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rosperity)’가 관념이 아닌 실제임을 보여주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또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구체적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할 것임. 미래의 비전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계획은 사문화될 위험이 있음

● **통일부 사업으로 적합한가?**

- 북한의 참여 가능 사업 또는 북한의 수요가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임. 특히 북한의 고통(pain)을 덜고 필요(needs)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의 기술을 선용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임

● **타 국가 사업들과의 연계성은 있는가?**

- 예를 들어, 러시아의 동방정책(선도개발구 사업)과 중국 일대일로(도로연통, 무역창통 등의 중점 협력분야)의 정신, 정책, 사업들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임
- 한국(통일부)이 제시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타 국가사업들 또는 지역 전략들이 갖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희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어느 정도의 신(新)사고가 필요한가?**

- 새로운 콘텐츠를 포함하는 사업에 새로운 브랜드를 입힐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나치게 새로운 사고는 일정 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움: 즉,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열 발자국 앞서 나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기록 또는 그 논의의 역사가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좋을 듯함
- 또한, 역대 과제를 계승 발전하여 국민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사업, 국민 상식과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단계적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사업인가?**

- 평화 과정의 진화에 따라 - 예를 들면, ‘남북 공동의 집’에서 ‘남북 하나의 집’- 사업의 내용과 주체가 달라져야 함
- 동시에, 광복 100주년(2045년)에 맞추어 한반도와 그 너머 동아시아에 평화경제공동체를 완성한다는 미래 비전을 염두에 둔 사업이어야 할 것임

## ■ 사업제안

- 위에서 언급되었듯, 단계에 따라 먼저 ‘남북 공동의 집’과정에서 한반도와 그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사업은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초점,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화하고 “Peace Valley”를 조성하는 사업과 (2) 북-중-러 접경 지역을 공동개발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Peace Valley’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음
  - ※ 최근 제63회 현충일 기념사에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유해 발굴의 선행조건인 지뢰 제거 등 DMZ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피력
  - 이에 DMZ를 하나의 “testbed(시험대)” 또는 “seedbed(모판)”로 삼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씨를 뿌리고 그 모가 잘 자라면, 향후 남북의 주변 지역과 그 너머의 북방과 남방으로 이식하고자 함
  - ‘Peace Valley’조성은 한국과 북한, 주변국들(중국, 일본, 러시아, 나아가 몽골,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임
  - 각 국가들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Peace Valley’에 상징적

사업, 무형의 가치 확산 사업뿐만 아니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익성 사업도 들어서야 할 것으로 사료

-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의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되어야 함: 즉, 식량, 환경, 전력, 보건의료 등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먼저 들어서야 할 것임

● 한편, 북-중-러 접경 지역 공동개발, 연결 사업과 관련, 4.27 남북 판문점선언이 이미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러시아 방문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경제협력은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로 공감했다...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철도, 가스, 전기 등 3개 분야를 들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바탕으로, 먼저 ‘남북 공동의 집’과정에서 한반도에 입주할 방 (또는 모판에 심을 씨앗들) 즉, 한반도에서 가능한 구체적 사업들(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반도 접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한반도 접경 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5-2 7대 사업 제안

### ① 친환경 팜(Eco Farm)

- 북한의 식량사정은 1990년대 대기근 시절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행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가운데 약 40%(즉, 5명 중 2명)가 여전히 영양결핍 상태에 놓여 있음

- 특히, 어린이 가운데 거의 30%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음. 식량 부족은 북한의 대표적인 “pain point”라 할 수 있음
- 식량 생산과 관련한 북한의 필요와 관련, 최근 중국을 세 번째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중관춘에 위치한 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방문, 재배 실험실을 살펴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의 주 연구분야 중 하나는 새로운 품종의 벼와 옥수수 개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에 대한 투자가 있음**

- 특히, 질산칼륨(nitrate) 비료는 2차 미세먼지와 오존을 형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원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Science Advances* 2018년 1월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20%는 농경지, 즉 질산칼륨(nitrate) 비료로부터 옴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느낀 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3.46점으로 북핵 위협(3.26점)보다 높은 수치임

● **이상에서 서술된 북한의 식량 필요와 한국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수요를 종합하여, DMZ 구역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건설하고 친환경 인증 쌀 재배를 시작할 것을 제안함**

- 한국에는 현재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친환경 농업지구 3곳(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② 스마트 팜 (Smart Farm)

- ‘스마트 팜’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온실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법이라 할 수 있음

- 스마트폰으로 온실의 천장과 냉난방기 등을 작동시키고 양액을 공급하며 온도 및 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 서울대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약 28%의 생산량 증가 효과가 있음

- 위 친환경 팜이 곡물 생산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다면 스마트 팜은 채소, 과일 등 현금 작물 재배하여 시장에 팔거나 수출하려는 경제적 취지를 지님

- 또한 ‘남북 하나의 집’단계에서 시도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남북 스마트 시티’와도 구별됨

- 스마트 팜은 농지에 그린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작물과 교감하는 AI 농법을 개발, 적용,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취지를 지님

- ※ 참고로,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 R&D 투자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 스마트 팜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이기도 함: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관련 6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4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

- ※ 미국 역시 스마트 팜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힘

## ③ Solar Park

- 태양광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며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청정 발전임
- DMZ 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 청정 발전을 이루어 북한의 전력난 해소와 한국의 탈원전 정책 현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지 윗부분에 설치하여 제한된 토지에서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최근 일본, 한국 등에서 시도되어 옴(아래 사진 참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 내 모내기, 경남 고성군)

- 태양광 발전 패널 아래에서는 벼, 인삼, 마늘 등 음식 또는 반음식 작물뿐만 아니라 소위 ‘solar sharing(태양광 공유)’을 통해 대표적인 양지식물인 벼 또한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참고로, 한국남동발전은 2017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100kw 급)을 경남 고성군에 준공한 바 있고, 최근 전라남도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힘

#### ④ 국제평화대학

- 사람에게 대한 투자, 가르침과 배움, 인적 교류를 통해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신을 구현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할 가칭 ‘국제평화대학’을 DMZ 내에 설립할 것을 제안
- 교과과정은 (국제기구, 국제법 포함한) 국제관계학, (동아시아) 지역학 또는 지역통합학, 평화학, 국제물류학, 교통학, 환경 및 자원학, 보건학 또는 인간안보학 등 외에, 위에서 언급된 친환경 팜, 스마트 팜, solar park 사업들의 현실화와 지역적/국제적 확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대학 내에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college를 두어 참여 학생들이 4차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돕고, 그 아이디어가 그들 본국에서 또는 그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할 것을 제안
  - ※ 참고로, 경기도는 2017년 ‘3개국 글로벌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는 ICT 분야 스타트업을 꿈꾸는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미얀마) 청년들과 그 국가들로 해외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한국(경기도) 청년들을 묶어 한 팀을 꾸린 후 4개월 간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하는 사업
- 국제평화대학의 교수진은 참여국들이 파견한 교수 또는

연구자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운영재원의 일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될 수 있을 것임

-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본에 소재한 UN University 또는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University for Peace 참고 가능
  - 1975년에 공식 설립된 UN University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그리고 세계 12개국에 분산되어 있으나) 산하 13개 대학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UN 회원국들 내 주요 대학, 연구소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하나의 국제학술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 UN University의 교수와 직원들은 약 75개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파견되는 형식으로 충원
  - 1980년, 인류의 상호 이해, 관용,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와 위협의 감소를 목표로, UN 총회에 의해 하나의 정부 간 조약기구(intergovernmental treaty organization)로 설립된 University for Peace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그리고 다문화적(multicultural) 접근을 통해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음
  - 상주하는 교수 외에 방문 교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프로그램, 세계 유명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복수학위(dual-degree)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제평화대학’과 별도로 그러나 인접한 거리에 남북학자들로 이루어진 통일연구원과 한반도 개발연구원 등과, 평화, 군축, 갈등 해결과 관련된 국내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함께 두어 하나의 교육·학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

## ⑤ 국제병원

- 2014년 발행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북한의 영유아 숫자는 약 8천 명으로 남한의 8배에 해당하여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백신 접종이 시급한 현실
  - 한편, 결핵, 간염,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성 질병은 북한의 사망 원인 2위로 25%를 차지함. 이는 남한에 비해 20%p 높은 수치
  - 특히 결핵과 관련, 2017년 세계결핵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결핵 환자는 약 13만 명이며, 이에 따라 북한은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분류
  -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위해 지난 7년간 약 1억380만 달러를 지원해 오던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가 올해 2월 그 사업의 종료를 선언할 예정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감염성 질병이 남한으로, 또는 남한의 질병이 북한으로 들어올(갈) 확률 역시 증가하리라 우려
  - 통일보건의료학회 표현처럼 “한반도 건강공동체 시대”가 가시화된 것임
  
- 판문점 선언은 10.4 공동선언(2007)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남북은 10.4 공동선언을 통해 보건 부문에 있어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DMZ에 가칭 “국제병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
  - 국제병원의 1차 목적은, 한국과 기타 국가, 국제기구, 국제 재단

등이 협업하여, 북한에게 양질의 기초적 의료서비스(예를 들어, 필수 예방백신 보급과 접종, 감염성 질병 진단과 억제/퇴치 등)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임

- 한편, 국제병원을 이원화하여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병동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래에서 제시할 DMZ “생태/역사/문화 관광”지 조성과 맞물려 국제의료관광 상품을 제공할 또 하나의 국제병원을 DMZ에 설립할 것을 제안

-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가 선진 의료 인프라와 기술을 갖춘 DMZ 국제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DMZ 생태공원을 찾아 요양 가능
- ※ 참고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6만여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그 수가 29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진료비수입도 증가하여 2015년 진료비 총수입은 약 67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4년 대비 20% 이상의 증가
- ※ 2020년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2014년 대비 약 4배로 커질 전망
- ※ 최근 한국은 글로벌 의료관광 전문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IMTJ Summit)에서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 수상

● 한편,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 수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임이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한국에 오는 의료 관광객 수도 증가 추세

- 이를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방문객들의 모국이 되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보 교환과 의료 협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⑥ 생태공원: 한국의 세렝게티(Serengeti) 조성

- 이전 정부가 2015년 12월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북측에 설명한 바가 있으나, 그 이후 발전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
- 문재인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DMZ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피력한바, 이러한 기조에 따라 DMZ 내 생태공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고 그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세렝게티는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 있는 광대한 초원/사바나로 70여종의 대형 포유류와 500여 종의 조류를 위한 원시적 서식지로 전세계에 매우 잘 알려져 있음
  - DMZ 역시 지난 65년 동안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 살아온 폭 4km, 길이 248km의 지역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약 6000종에 이르는 생물이 살고 있음.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101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 이상을 고려하여, DMZ에 또 다른 세계적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DMZ 생태공원 조성은 새로운 생각은 아니나 후속 세대 또는 인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보존하는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DMZ, 한국의 세렝게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 브랜드 파워 또는 인지도를 제고할 것을 제안
  - 이것은 DMZ 생태공원이 남북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상대로 한 하나의 수익 사업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⑦ 평화공원: 복합문화단지

- DMZ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평화적 가치를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전시관과 박물관 그리고 남북 그리고 국제 공연과 행사를 위한 가칭 “평화의 전당”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문화단지 (가칭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

- 전시관과 박물관은 한국전쟁과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안긴 아픔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일구어 번영을 이룬 다양한 국내외적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 ‘평화의 전당’은 한류 공연, 북한 예술 공연, 그리고 남북 합동 공연 등을 통해 남북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
- 또한,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지닌 독일이 자랑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2008년 평양 공연을 한 바 있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초청 공연을 정례화 할 수 있을 것
- 베를린 국제 영화제나 부산 국제 영화제 등과 견줄 수 있는 DMZ 국제 영화제 역시 기획, 개최할 수 있을 것
- 남과 북의 대표적 음식을 포함한 국제 푸드 페스티벌 등의 개최도 가능할 것임

### 5-3 기타 사업 제안

- 한반도 접경 구상: 위 한반도 신경제 구상들과 함께, ‘남북 공동의 집’단계에서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은 중국, 몽골, 러시아 등 한반도 북방에 위치한 국가들과 남북한을 철도, 가스관, 전력망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의 주요 축을 이루는 사업이 할 수 있음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9개의 다리 (9-Bridge) 전략’을 재차 강조한 바 있음: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철도, 에너지(천연가스), 전력 협력이 이루어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 ※ 9개의 다리 전략 -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철도, 천연가스, 전력, 조선,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사업

- 철도와 관련,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선언함.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3차 방중 시 철로교통통제센터와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 철도 인프라 구축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임.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이 완성되면 이는 각각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그리고 만주횡단철도(TMR)와 몽골횡단철도(TMR)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천연가스 협력 사업은, 북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석유 외의)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시킨다는 의미가 있음. 또한 한국에게 있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하는 등 주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음
- 전력 협력과 관련, 한국전력은 이미 201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약 1000 km의 전력망 연결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연구 보고서는, 위 협력 또는 연결 사업들의 시급성, 수익성, 현실성 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보다 새로운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사업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1) The Ra-Za Sea Complex (라진-자루비노 해양 복합단지)

- 북한의 라진과 러시아 극동의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거대한 연해 지역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협업하여 청정 발전과 수산양식업 기지화 할 것을 제안
- 석탄 발전이 아닌 천연가스 발전이라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은 대기 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에너지원(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않음
- 이에 라-자 연해에 풍성한 “재생 가능한(renewable)” 에너지원

- 즉,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전력망을 통해 공급할 것을 제안
- 주목할 점은 위 청정 발전이 내륙이 아닌 바다에서 이루어져 토지를 점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아래 사진 참고)



예시: 해양풍력발전



예시: 태양광 발전

- 해양 풍력 발전과 관련, 판문점 선언이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 발표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도 풍력 발전 가능
- 한편, 수산물(수산물)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여국들에 대한 수산물 단백질 공급을 돕고자 라-자 연해에서 수산물(조업이 아닌) 양식업 추진 가능
  - 중국은 수산물 양식량이 해양 조업량을 초과한 첫 번째 국가로 알려져 있음. 한국의 양식 기술은 러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이 지역에서의 수산물 양식업은 수산물 가공, 저장, 유통을 위한 인력 고용, 시설 건축이라는 부대 효과도 창출할 것임
  - 무엇보다(아래에서 언급되듯) 연해주에서 대규모로 콩이 생산되면, 그 콩을 이곳의 수산양식업을 위한 훌륭한 사료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사이의 협업이 가능

## 2) 극동 친환경 스마트 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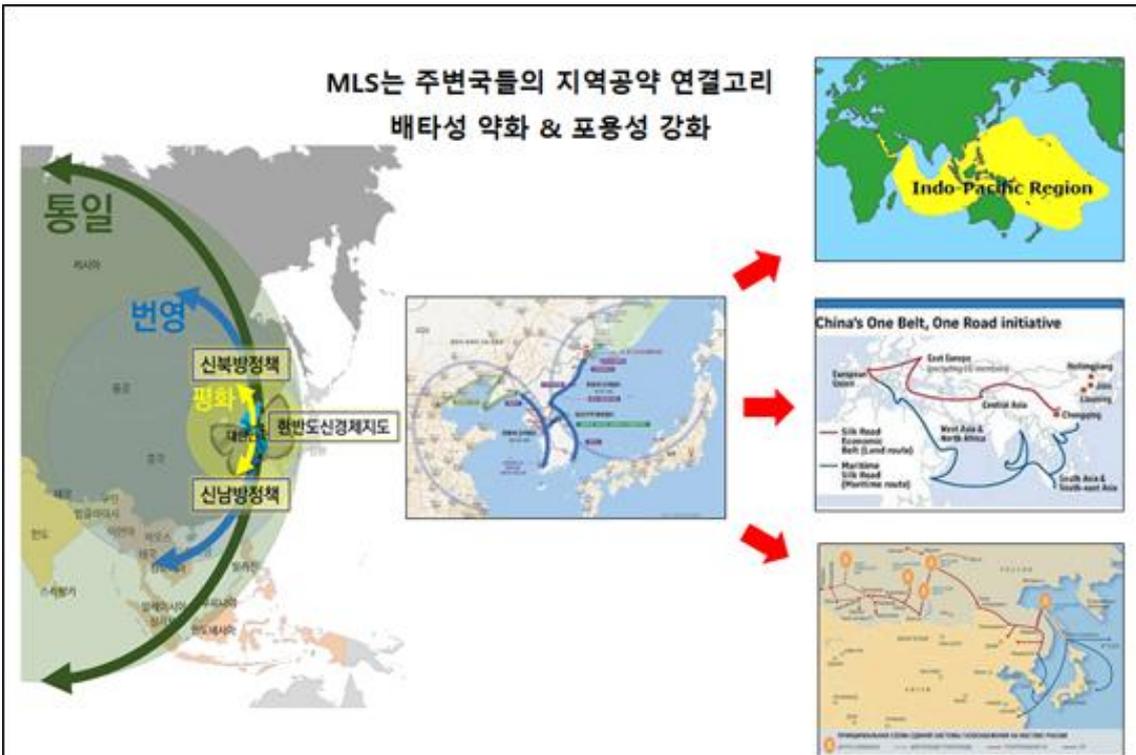
- DMZ를 대상으로 하는 위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밝힌 친환경 팜과 스마트 팜을 러시아 극동(연해주)에 확대 적용시킬 것을 제안: 즉,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하나의 협력 '선도개발구'를 조성,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 곡물(옥수수, 콩)을 그리고 AI 농법을 이용하여 채소, 과일 등 현금 작물 재배
- 그러나, 극동에서는 DMZ와 달리 조방식, 기계식 농업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차별성이 있음: 옥수수, 콩 등을 대규모로 생산 가능
- 대규모로 생산된 곡물은 민생용 식량, 가축 사료, 수산 양식업 사료 외에, 무엇보다 에탄올(옥수수), 바이오 디젤유(콩) 등 친환경 무화석연료(non-fossil fuel)원이 될 수 있음
- 이렇게 생산된 곡물은 철도 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무화석연료는 천연가스관이 나란히 건립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장차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러시아 극동에는 이미 7개 한국 농기업이 약 5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음: 중국은 동북 3성 경작지의 80%가 옥수수

생산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토지를 매입, 연료용 옥수수과 콩을 생산해오고 있음

- 한편, AI 농법과 관련, 일본 Hokkaido Corporation은 이미 러시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극동 Yakutsk에 위치한 “Sayuri greenhouse complex”에서 ICT를 적용해 토마토를 재배해 오고 있음

부록(Appendix): 가교국가전략 PPT 다이어그램





**I. Moon's LinkER State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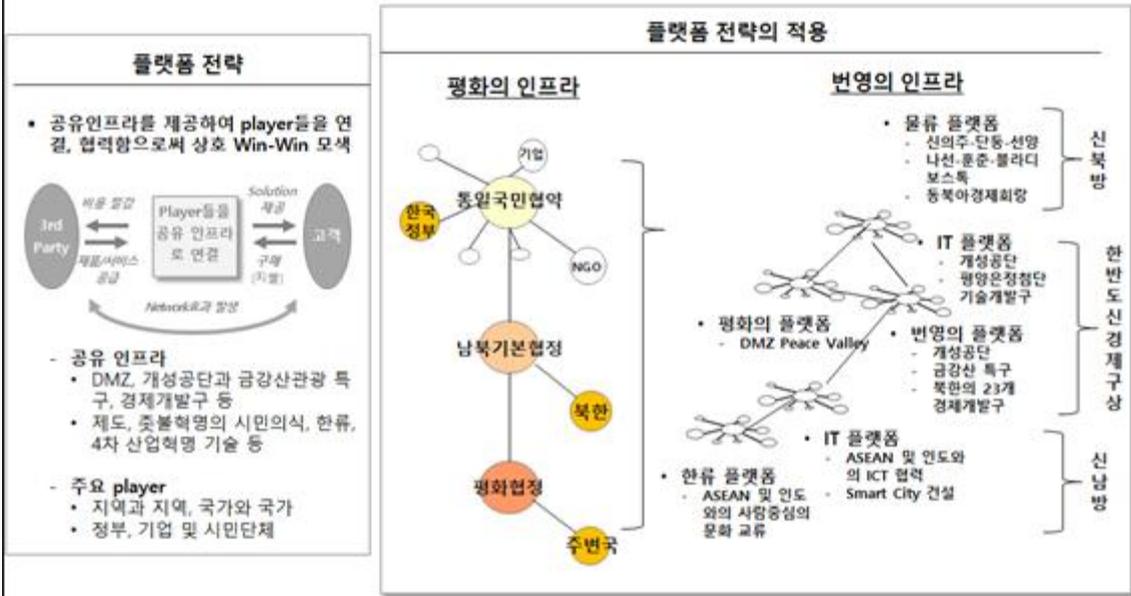
MLS는 가교국가의 역할을 통해 평화 - 번영 - 통일을 기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구상임



## II. Moon's Linker State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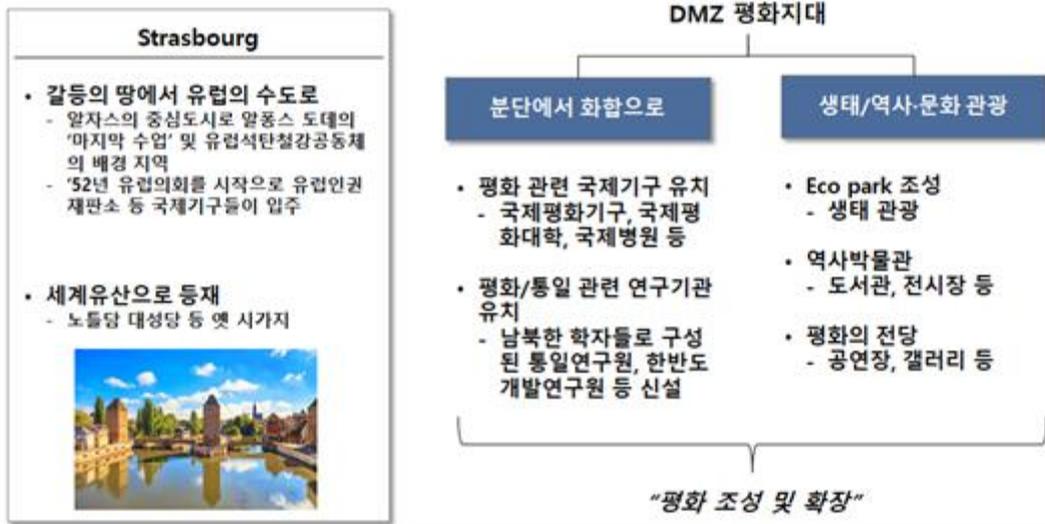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인프라로 남과 북, 북방과 남방을 연결



II. Moon's Linker State	Linker State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미국대외정책, 계별 주요사업
김준형	책임 연구원	한동대학교 '남북 공동의 장'과 '남북 하나의 국제지역학'과 교수	동북아 국제정치, 중의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 미중, 북미, 한미관계
조성렬	연구위원	남북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남북 하나의 진안보, 남북관계, 북한
원동욱	연구위원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	북중관계, 중국일대일로, 동북아 교통물류
이영훈	연구위원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 북한경제, 글로벌 지역경제, 교통물류
김지운	연구위원	충남대 정외과 교수	북중관계, 미중관계, 환경 및 자원안보
변남수	조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II. Moon's Linker State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례: DMZ Peace Valley(평화의 플랫폼)

DMZ는 스트라스부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화와 생태관광의 Peace Valley로 조성



II. Moon's Linker State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례: 개성공단(변영의 플랫폼)

개성공단은 남북한 4차 산업혁명의 산실로서 향후 변영 및 IT 플랫폼으로 활용

